

www.klri.re.kr

2015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5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발 / 간 / 사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래 지난 25년간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정책 현안에 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법제화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한 해에도 행정, 경제,
복지,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5대 국정지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과 과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지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법제적 지원」
「건강한 정보통신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적 지원」을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는 법제분야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연구성과물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 정비하는데 기여하고자
「2015 KLRI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서는 2015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내용,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성과와 2016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5 KLRI 연차보고서」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법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전 연구진과 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 2

원장 이 원

CONTENTS

003p

발간사

006p

기관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 기관운영 목표
-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2015년도 사업개요

004

2015
Annual
Report



2015년도 연구성과

기본연구사업

-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2015 국민법외식 조사 연구
-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 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II)

수시연구사업

- 법제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분석
-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 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 일본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휴가·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방안 연구

일반연구사업

- 지역법제연구사업(X)
- 입법평가연구사업(X)
- 법제교류지원사업(VIII)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VI)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
- 법제분석지원사업(IV)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수탁연구사업

140p

2015년도 주요활동

-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 발간간행물

151p

2016년도 연구계획

- 2016년도 사업추진방향
- 2016년도 사업개요



01 기관현황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기관운영 목표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2015년도 사업개요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기관의 목적_ (정관 제2조)

-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기관의 사업(주요 기능)_ (정관 제4조)

- 국내외 법제와 입법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및 보급과 전산망 사업
- 법령의 입법취지와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의 발간·보급
- 입법기술·법령용어정비·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 인사 초청연구사업
-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나 민간단체에서의 연구용역 수탁
-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기관운영 목표

경영목표 01 신뢰받는 연구수행 시스템 운영

1 연구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연구품질 개선

- 단계별 연구기획기능 강화
- 연구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 연구분야별 협업시스템 구축

2 연구윤리와 연구 품질 점검 시스템 구축

- 자율적 연구윤리 프로세스 운영
- 연구심의회와 연구윤리의 연계방안 구축
- 연구 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포상

3 개방과 공유(정부3.0)를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 과제 발굴 및 선정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 강화
- 고객중심형 연구수행 네트워크 운영
- 연구성과 확산의 다양화

경영목표 02 국내·외 연구협력 강화

1 네트워크 기능 강화를 통한 멀티플 리서치

-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법제이슈 발굴
- 법령정보 네트워크 고도화
-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협력체계 구축

2 한국법의 위상 제고

- 영문법령 제공 확대를 통한 한국법의 접근성 강화
- 한국법 교재발간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우리법령 우수성의 홍보강화



경영목표 03 정책연계를 통한 책임입법지원

1 정책현안 대응형 입법정책 연구지원

- 국민행복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지원
-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지원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규제정책 연구지원

2 미래사회 구축을 위한 법제 연구지원

-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지원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법제 연구지원
- 미래사회 대응형 법제 연구지원

3 단계별 책임입법 지원

- 법제분석지원을 통한 고도화된 정책지원
- 입법평가의 제도화 지원

경영목표 04 세종시 시대에 맞는 경영시스템 구축

1 세종시 이전과 조기 정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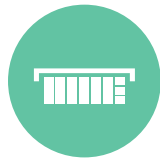
- 세종시 이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세종시 이전에 따른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노사관계 안정화와 열린 조직문화 정착

2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체계 구축

- 세종시 시대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 수립
- 세종시 시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채널 다양화
-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관리·육성

3 경영내실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전략 수립

- 연구지원업무의 프로세스화 및 지속적인 경영혁신
- 급여제도, 평가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체(협동)감사 시스템 강화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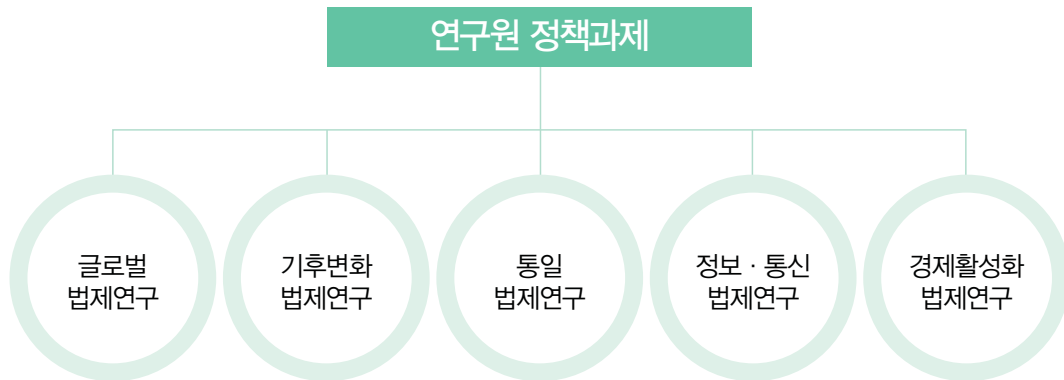


1.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2. 맞춤형 고용·복지
3.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4. 안전과 통합사회
5.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2015년도 사업개요

1. 2015년도 사업목표

국정과제	경영목표	2015년 사업목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받는 연구수행 시스템 운영 · 국내·외 연구협력 강화 · 정책연계를 통한 책임입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을 위한 법제적 지원 · 건강한 정보통신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적 지원

2. 연구사업 운영방향

2015년 사업목표	연구사업 운영방향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을 위한 법제적 지원	·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통일법제연구
건강한 정보통신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제적 지원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을 위한 법제적 지원 연구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p>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p> <p>입법시 법적용대상 선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연령 기준은 입법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으나, 동일한 개념에 관해서도 다른 연령기준을 사용함으로써 법해석상, 법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다양한 연령기준 설정에 관하여 효과성 및 체계정합성의 문제, 연령 차별 등 헌법적 문제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입법상 연령 기준 설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p>
2	<p>2015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p> <p>일반 국민의 법의식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하고, 구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국민법의식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p>
3	<p>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p> <p>재해예방을 통한 도시공간의 관리강화를 위해 정부는 도시방재에 초점을 두고 그 기반을 마련 중에 있으나, 도시방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법제 기반이 없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재해예방적 도시공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방안 제시</p>
4	<p>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p> <p>현행 행정형벌 조항 중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구성요건 자체 또는 중요부분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전면적으로 위임한 경우,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비하여 형량이 부적절·불합리·과다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법준수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p>
5	<p>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p> <p>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불명확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밖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법령 및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p>
6	<p>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p> <p>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체계의 정비와 의료기술의 진보, 건강 증진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립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제시</p>
7	<p>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p> <p>정책현안 및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국가 행정운영 특징으로서의 정부3.0과 국가정보 운영현황 및 관련 법제를 속성, 영상, 공간정보로 구분, 이를 심층 조사·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관련 법제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우리나라 정부3.0 구현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제시</p>

8	<p>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p> <p>최근 중국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자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정부는 작년말 고농도 미세먼지 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은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대책들이 많고, 관련 법제정비를 통한 항시적·지속적 대응체계를 구축함에는 부족한 실정임.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법제개선이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p>
9	<p>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p> <p>자연자원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및 관리와 현명한 이용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으나, 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이해상충, 자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불균형적 배분, 전근대적 자원관리방식, 새롭게 등장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부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 자원의 관리와 현명한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연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제연구를 통해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개별법에 관한 개정방안 제시</p>
10	<p>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p> <p>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은 계속 발전하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금융의 공인인증서의 유출이나 복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전자금융의 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의 스마트화에 대응하고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p>
11	<p>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 <p>대규모유통업과 중소기업, 대규모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권 및 영업형태에 관한 분쟁은 유통시장의 개방과 유통업의 대형화 이후 지속적인 문제로 경제양극화의 해소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해결과제임. 이에 정부의 국정 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소유통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p>
12	<p>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p> <p>지역사회개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금융 육성 등의 정책시행으로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조성이 요청됨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및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제고와 전문적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및 금융매개시스템 구축하며, 기금, 재단, 펀드 등 자원조성 관련 법제도적 정비 및 재무위험 축소 및 분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p>
13	<p>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p> <p>현 정부는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을 문화융성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21세기 국가 성장 주요 동력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와 같은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는 그 적합성과 체계성에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관광자원의 생산, 개발 및 소비와 분배 등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도출</p>
14	<p>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 (II)</p> <p>가족공동체의 해체라는 현상과 가족공동체를 구성하지도 못하는 국민의 비중이 급증하는 현상은 가족법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법 영역에서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정립을 필요로 함. 이에 미혼, 이혼, 고령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공동체와 함께 1인 가구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와 관련되는 법제의 정비와 보완을 도모</p>
15	<p>수시연구사업</p> <p>연구 결과가 단기간 내에 요구되는 현안 법제관련 문제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입법정책 수립에 신속하게 대응</p>

나.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법령영역사업
	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증진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제고, 대외무역과 교류의 촉진,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확대에 기여
2	법제정보사업
	법제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
3	국내외연구공조네트워크 구축
	법제연구의 국제화·선진화를 도모하고 내적으로는 법제연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제관련 국내외연구 기관과의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물적·인적 교류를 활성화

다.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기관지 발간
	기관지「법제연구」 및 소식지「법연」의 발간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확산
2	법제정보자료 운영·관리사업
	국가적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 및 사업·법제정보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국내외 법제자료를 수집·관리,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연구사업을 지원

2.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지역법제연구사업(X)
	세계 각 지역의 법제에 대한 조사·분석은 우리나라 법제연구와 입법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특히 2013년 신정부 출범이후, 정책분야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법제의 조사·분석 필요성이 부각됨. 이에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국내외 국제 이슈의 접점이 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수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정부의 입법지원을 위한 지역별 외국법제 조사 확대

	입법평가연구사업(X)
2	현대 입법에 있어서 나타나는 과도한 입법의 홍수는 입법의 비능률과 비효율을 발생하게 하고 있으므로 입법평가를 통한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입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입법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객관화·과학화를 유도하고, 입법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와 이해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규범성의 강화를 통한 입법의 신뢰성 확보
	법제교류지원사업(VIII)
3	한국법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기반한 법제발전경험공유를 통하여 법제지식 전수사업으로서의 국내 관련기관 및 ALN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각국의 한국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국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글로벌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해외한국법제연구 및 교육을 지원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VI)
4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제는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임. 이에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자 국정목표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공약을 이행하고,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하며,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적 기후재원 공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
5	우리 법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논의는 법제의 글로벌화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음. 이에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rt, 미래법제전략연구 Part, 기초법제전략연구 Part로 구분하여 UNCITRAL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법제에 관한 전략적 연구, FTA법제전략연구 등 법제토대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
	법제분석지원사업(IV)
6	사회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주요 국가현안을 중심으로 입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분석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 차원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현행법제분석, 외국법제분석, 법률안분석 등 여러 유형의 전문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국가주요현안에 대한 입법법 수요에 부합하는 법제분석지원시스템을 구축·활성화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7	남북한관계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을 향한 도정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과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 등을 실마리로 삼아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쌍방간에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각 부처의 통일대비법제 연구 및 법제통합 작업을 지원
	망분리 구축 사업(3단계)
8	업무망 및 PC에 대한 가상화 시스템 및 관리서버를 구축하여 보안성 강화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9	ERP 및 그룹웨어 시스템 등의 정보화서비스 유지보수, HW유지보수, SW유지보수 및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02 2015년도 연구성과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기본연구사업

-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2015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 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II)

조례의 법령 · 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oincidence on Laws,
Regulations and Constitutional Law of Municipal Ordinance

주제어

조례,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을 명문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불명확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나 헌법상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조례 중에는 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에 맞지 않는 경우 등도 많음.
- 이상과 같은 조례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
- 이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②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③ 불명확한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④ 헌법상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경우, ⑤ 기태용어 사용이나 문장 구성 등 형식적 완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지 않는 조례 사례)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법치행정을 제고하며, 조례의 법령 및 헌법 합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판단기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함.
- 제3장부터 제5장까지에서는 연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대상 분야별로 사례를 발굴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6장에서는 발굴 사례의 현황을 정리하고 조례의 법령·헌법합치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대 효과

-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 확보하고, 법준수도를 고양할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고,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갈등 및 법적 분쟁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의 법령·헌법합치성 및 형식적 완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

Legislation Study on Social Finance

주제어 사회적금융, 사회목적투자,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금융, 협동금융

연구자 | 이준호(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사회적금융이란 민간투자·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금융은 기존 상업금융의 수익우선이 초래한 금융소외 현상의 해소 및 사회문제해결 주체를 위한 금융지원의 강화 필요성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사회적금융의 유형으로서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금융”, “협동금융”, “사회목적투자”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금융지원 등의 정책시행으로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의 법적 근거 및 제도설계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도출함으로써 법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사회적금융의 법제도적 필요성으로 인하여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법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사회적금융의 개념
 - 사회적금융이란 민간투자·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고려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함

- 사회적금융의 유형
 - 마이크로파이낸스
 -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으로서, 주로 소액금융이나 서민금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을 의미함
 - 사회목적투자
 - 일반적인 투자방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투자와 동일하지만, 투자목적이 금전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을 의미함
 - 협동금융
 - 동종업자, 동업자 등 인적결합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부조 및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을 의미함
 - 지역금융
 -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을 의미함
- 영국 사회적금융 제도화의 특징
 - 사회적금융에 관한 시장의 형성 및 구축 : 중간지원조직 등 준비를 통한 시장형성
 - 정부지원방식의 개선 : 민관협력을 통한 지원 및 펀드 창설
 - 사회적금융 사업의 추진 : 공동체이익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사업 지원
 - 자본제공의 다양성 제고 : 보조금과 민간재원의 혼합 및 비율 조정
 - 연금과 사회투자의 연동 : 사회성과연계채권 등에 대한 연금펀드의 투자
 - 금융소외대상 대출의 투명성 확보 : 금융포용정책에 기반한 금융소외대상 지원
-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 사회적금융 관련 법제의 추진 현황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서민금융지원법 개정
 -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
 -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검토
 - 자본시장법 또는 대부업법 등 개정 필요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시 서민금융지원을 위하여 도입 검토
 - 사회목적투자 분야
 - 사회성과연계채권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모태펀드 활용

- 지역금융 분야 및 협동금융 분야
 - 지역금융기관 육성 및 지원
 - 공제조합 및 지역재단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기금 조성
 - 투자회사제도 설립 및 활용

기대 효과

- 사회적금융 법제와 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자료 제공

미세먼지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Legislative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laws to reduce particulate matters



주제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염저감, 미세먼지 환경기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자동차통행제한

연구자 | 현준원(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2013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나, 미세먼지 오염저감에 관한 법정정책적 연구가 미약한 현실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가 또는 인접국가의 미세먼지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은 주요국가의 환경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비하여 두배 가까이 악한 수준이므로, 우선적으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강화할 필요가 높음
- 특히 환경기준이 강화되어 환경기준 초과 정도나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개선 노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경기준 강화는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가 될 것임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 시행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미세먼지 오염을 포함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가 많고, 실제로 이 제도의 시행 이후 국내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이 지금은 경기지역을 제외한 서울, 인천지역에선 환경기준 이하로 개선된 바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확대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지역에는 충북, 강원, 전북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의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행 대기오염경보제도는 경보발령 기준은 국민이 사전에 충분히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곤란함이 있어 보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즉 이미 환경기준을 상당히 초과한 수준의 오염이 일정정도 계속되었을 때 비로소 대기 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보발령 기준은 사전적으로 환경기준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미세먼지의 경우에도 오염이 중한 경우 중대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경보 시 사업장 조업제한이나 자동차 통행제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세먼지 오염은 지역별로 다른 특성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지역별로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높음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망 확대와 미세먼지 오염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벤토리 구축이 시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할 만큼 사람의 건강에 위협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장기준에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므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오염문제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수립 노력이 요청됨

기대 효과

- 미세먼지 오염저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미세먼지 오염 저감 정책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여함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cooperation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Retailers

주제어 유통산업발전, 상생협력, 대규모유통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영향평가

연구자 | 김윤정(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90년대 초 유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1990년대 말 이후 유통산업에서 대규모 유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산되었음
 - 대규모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진출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쇼핑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였고, 유통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유통산업 선진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이면에는 지역경제력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력의 실질적 위축, 대규모유통업체 중심의 메가상권 형성으로 인한 주변 중소상권의 쇠퇴, 대규모유통업체의 고용창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실업 초래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상존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와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를 마련하려고 함
 -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유통업 규제 개선의 측면과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대·중소유통업의 현황 및 갈등
 - 대규모유통업점의 급격한 사업 확대와 무분별한 골목시장 침투에 의해 중소유통업점이 큰 타격을 받고 이들의 위기의식이 증대하자 대·중소유통업간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유통산업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규제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점은 반발하고 있으며, 중소유통업점들은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각종 현행 규제들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점과 중소유통업점 간 진정한 공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대규모유통업점의 골목상권 침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유통업점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의 내용과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점은 이러한 규정이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는 대규모유통업점이 출점하기 위해서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중소유통업점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상생협력법의 내용과 문제점
 - 상생협력법 제32조는 적합업종 합의에 관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불만이 있는 경우 사업조정을 직접 신청하지 못하고 반드시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적합업종으로 지정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문제점

-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임차인만 보호할 뿐이고, 매장임차인과 전대차 관계에 있는 전차인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불공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 현실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이 중소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직접 계약하는 방식보다는 중간 유통업자인 유통벤더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규모 유통업법은 벤더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소상공인법과 전통시장법의 내용과 문제점

- 소상공인법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데, 이로 인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부도·파산으로 인한 실직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은 문제가 있음
- 전통시장법은 전통시장이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상점가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점의 출현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의 주체는 소상공인이나 골목 또는 노변상점지구의 상인들이 대다수이지만, 전통시장법은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 관련 해외사례

■ 프랑스

- 프랑스는 상법전의 영업허가의 방식을 통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한 출점규제를 가장 먼저 시도한 나라 중의 하나이며, 현재도 비교적 강력한 출점규제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대규모유통업점의 출점에 대한 영업허가 이외에도 도시계획법전상의 입지규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도시 외곽을 중심으로 대규모유통업점이 자리 잡고 있음

■ 독일

- 독일은 대규모유통업점에 대해 건축법 및 건축이용령상 도시계획에 근거한 일반 대규모건축물에 대한 입지규제를 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점의 출점이 기존의 소규모 소매영업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각 주별로 소매업조례에 근거해 출점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영국
 - 영국에서는 대규모유통업점의 설립 등 사적인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12년 제정된 가이드라인 국가계획정책 프레임워크(NPPF)에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개발계획이 우선적으로 도심지에 배정되도록 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에서는 대규모유통업점의 규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보호에 중점을 두던 종래의 입장에서 전환하여 현재는 도시계획과 생활환경조성 및 환경정책에 기초한 입지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일본에서는 이러한 입지규제에 따라 대규모점포가 도심외곽으로 이동하여 도심이 공동화되자,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대·중소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선방안
 -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와 달리 도심에 대규모유통업점의 출점이 허용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역상권에 피해를 주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상권과의 조화 및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높은 규제라고 생각함
 -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규모유통업점의 입점에 대한 실질적인 상권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점포가 출점 등록을 함에 있어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과 이에 대한 검토의 형식화·부실화 우려를 막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상생협력법의 개선방안
 - 상생협력법에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합의도출 절차와 관련한 독립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절차진행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간 내에 합의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선방안

- 매장전차인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유통업체에 납품을 목적으로 유통벤더사와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함으로써 중간유통업자인 벤더사와의 거래를 통한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법과 전통시장법의 개선방안

- 소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서도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소상공인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주변상권에 대해서도 상점가진흥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전통시장법에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대규모유통업법」, 「소상공인법」, 「전통시장법」 등 유통산업 관련 정책 및 법령 개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Legislation Research for New Technology-based secure electronic financial stability

주제어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보안, 핀테크

연구자 | 성승제(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갖추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 현실은 이와 달라서 한국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정도에 다다라서, 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전자금융업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수도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준비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본연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함
- 연구의 목적
 - 적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 책임을 묻는데 소홀히 하는 현상을 파악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전자금융거래법의 또다른 목적인 전자금융업의 발전도 얻기 쉽지 않음
 - 그것은 한 때 IT기반이 잘 발달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최근 소위 핀테크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에서는 그다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핀테크 발전을 위한 무규제원칙 등 규제철폐 정책을 도입하는데도, 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를 일견하여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그리고 신중 인증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전자금융거래 동향에 대하여 핀테크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소개하고 검토함
- 국경간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전자금융거래 법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석함
- 이용자 중과실의 범위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쟁점 검토 및 분석

기대 효과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상 개인정보보호가 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경우에 기초자료 제공
- 전자금융업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 제공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관리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The Legal Study on Strengthening Disaster-preventive Management of Urban Space

주제어

도시재해, 도시방재계획(방재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방재법

연구자 | 손 현(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폭설 등의 대형 자연 재해의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우리 삶의 공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지역에서의 재해발생은 도시기능의 고도화, 토지 이용의 고밀·복합화로 인해 그 피해의 정도가 1차적인 재해(재난)의 범위를 넘어서 2차·3차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도시 기능의 마비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도시재해에 대응하는 도시방재 대책은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에 기초하여 다양한 조직 및 법률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재해의 사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절차에 따른 추진 정책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함께 고려되어 하나의 도시 방재 시스템으로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작동될 수 있어야 함.
- 즉,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 및 방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유형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 공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에서 벗어나 도시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등의 배치 등을 포함한 도시공간에 대한 근본적인 도시계획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이번 연구는 재해예방적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도시공간 계획 즉, 방재도시 계획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계획 과정에서 올바른 방재대책이 수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도시 공간에 대한 방재계획 법제가 어떠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한계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재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국토의 공간계획상에서 도시의 방재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통칭하는 방재도시계획의 의의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재도시계획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함.
- 또한 도시방재의 경우 해당 지역의 공간 특성 및 재해 유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도시방재계획 권한 강화와 책임 부여가 매우 중요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영역이므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의 방재도시계획운영 현황과 해외의 동경, 런던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이를 바탕으로 재해예방적 도시공간 계획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상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법령 개정시안을 마련함.
- 도시방재계획과 관련하여 정책 부서의 노력으로 도시계획수립 시 재해취약성 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등 최근까지도 많은 입법적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법령 개정 사항은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및 도시계획에 방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자연재해 대책법상의 제도와의 연계 강화, 도시계획 수립 기준의 강화 등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 현행 법령 체계에서 방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계성 및 내용상의 구체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도시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국토계획법 등에서 방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부분계획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운영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종합적·체계적인 도시방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로써 「(가칭)도시방재법」 제정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입법을 제안함.

기대 효과

- 도시방재에 관한 법리와 계획수립, 운용, 절차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도시방재 관련 제도 및 입법 현황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방재의 연구범위를 확대·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도시방재법 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도시방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방재대책과 도시방재계획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015 국민법 의식 조사 연구

A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15



주제어 법치국가, 법치주의,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간통, 사회적 약자

연구자 | 현대호(연구위원), 김명아(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과 법치주의의 실현이 이슈화되고 있으며, 국민법 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법제도와 국민법 의식의 상호 조화를 통하여 선진법치국가 실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종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하여 온 국민법 의식 조사 연구에서와 같이 국민법 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 의식 변화에 관한 시계열 분석과 국가법제도의 주요 이슈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국민법 의식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함
 - 특히, 2015년 국민법 의식 조사 연구에서는 새로 도입한 국민법 의식지표를 활용하여 국민법 의식과 그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개선과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사회 변동과 국민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 가족 내 의사결정주체가 부모(부부)공동이라는 응답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이유로는 사회적 배려 또는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법에 대한 인상은 권위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법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률관련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시계열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하여 얻는다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계약서 숙지정도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이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많아졌으며 매우 자세히 읽는 응답의 비율은 감소 추세였음
 - 준법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준법정도보다 자신의 준법정도가 확연히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으며, 법을 비준수하는 이유로는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불량품을 구입 시 대처방법에는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와 '한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대조적인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음
- 현행 법제도와 국민법의식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
 - 로스쿨제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반하여 국민참여재판은 성과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 사형제는 폐지를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고, 안락사(존엄사)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시계열적으로는 찬성의견의 비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
 - 노사관계법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책임에는 사업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았음
 - 비정규직 보호법은 성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직업별로 보면 무직/기타와 학생 집단이 성과가 없다고 많이 응답하였음
 - 간통죄 폐지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율이 높았음
 - 성매매중사자 처벌은 찬성의견이 많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찬성율이 더 높았음
 - 김영란법 도입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응답이 많았음
 - 국민법의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국민법의식지표(6개 분야의 30개 설문 문항)를 개발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였음

- 2015년 국민법의회식지수는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음. 6개 차원별 국민법의회식지수는 ‘법에 의한 기본권 보장’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법에 대한 관심’, ‘법의 실효성 보장’, ‘법에 대한 인식/정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준수’와 ‘법의 제정/집행’ 지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음
- 2015년 국민법의회식지수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40대 이하 연령층에 비해 10점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지역규모가 클수록,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는 미혼 이외 계층의 법의회식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2015년 국민법의회식 조사 연구는 현행 법제도의 시계열 분석과 이슈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법의회식 변화를 고찰하는 성과를 도출하였음.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새롭게 개발한 국민법의회식 지표와 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법의회식을 분석하여 차원별 및 항목별로 국가법제도의 개선 전략을 제시하였음
 - 다만, 시계열분석 설문항목과 법제이슈 설문항목은 여전히 해당 설문항목에 한정하여 국민법의회식을 고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며 국내외 사건 및 언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음
 - 국민법의회식 지표는 수치화 된 지수형태로 국민법의회식을 제시하였기에 점수화 된 국민법의회식 지수가 가지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국민법의회식 지표는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점 등에서 분석 상 한계가 있음

기대 효과

-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및 경제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과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현실에 맞는 국가법제도의 집행과 국민법의회식 수준에 상응하는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정부에 대한 정책 자료 제공

관광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A Legislative Research for Promoting the Tourism Economy

주제어 관광진흥법, 관광산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카지노업

연구자 | 강문수(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관한 중심기조는 “문화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
- 또한 이의 실제적 추진 및 제고를 위한 핵심요체로서의 관광산업 진흥은 변화된 관광정책의 패러다임과 국제사회 관광환경에 있어 지속적인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연구적 노력과 전개는 관련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그 필요성과 정책적 실현 방안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전개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실제적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
- 특히 관광법제로서의 관광기본법을 위시한 현행 법체계는 관광기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광진흥법」의 과도한 규범화 현상에 따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관광법제에 대한 문제점에 근거, 우선적으로 관련 법제의 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선행하고 이후 이에 따라 개별 법률로서 위치하게 될 관광산업(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별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입법 규정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 궁극적으로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목적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 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관광산업의 특성과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정도를 관련 통계치를 통하여 살펴보고,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분류체계와 이의 운영 현황을 살펴 연구주요대상으로서의 관광산업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고 독일, 일본, 중국 등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주요 정책으로서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가의 경우를 살펴 이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
- 제3장에서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 등 주요 관광산업의 유형별 실무적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물을 수집·정리하여 향후 법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4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관광법제의 문제점을 입법 체계적 관점에서 우선 평가하고 이에 근거, 관광산업의 주요 업종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개별 규범화의 타당성과 실무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각 업종별 주요 논점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주요 내용

- 관광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의 범위
 - 관광산업의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분석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도 파악
- 주요 관광산업별 운영현황과 문제점
 - 관광산업 분류 중 가장 많은 영역을 점하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실무상 운영현황과 문제점 파악
 - 여행업의 경우 저가 덤핑여행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와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관광숙박업의 경우 9개 부처 8개 개별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는 숙박업에 대한 법제 및 업무상 혼란을 그리고 카지노업의 경우 국가적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전개

-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현행 관광법제상 관광기본법의 비효율성과 이의 개선과 아울러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 업종별 분법화를 개선방안으로 설정
 - 이 가운데 여행업, 관광숙박업, 카지노업에 대한 개별 법률 입안 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비교법적 검토와 아울러 국회 등에서 제기된 바 있는 법률안을 소개 및 평가를 통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범체계 마련에 이바지

기대효과

- 지속적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적 토대로서의 관련 입법 체계의 정비와 주요 산업별 개별 규범의 정립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구현
- 본 연구 성과물은 또한 향후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입법정책 자료로서 활용 기대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주제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행정제재, 행정상 의무이행, 비례의 원칙

연구자 | 최환용(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대다수의 행정법규에서는 일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행정형벌 중에는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국민의 법 준수도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 버릴 우려가 있거나 구성요건 자체 또는 중요부분을 하위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함
- 또한 행정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나 위반행위에 비하여 형량이 부적절·불합리·과다하거나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를 행정형벌로 제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됨
- 이상의 경우들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법 준수도를 떨어뜨리고 다수의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편의주의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유발하며 국민과 행정간의 불필요한 마찰·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그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현행 행정형벌 조항 중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구성요건 자체 또는 중요부분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비하여 형량이 부적절·불합리·

과다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을 조사·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법 준수도를 높이며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유발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행정형벌은 행정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는 형벌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행정질서벌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음. 그리고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과 비교하여 균형적인 재편이 요청되며, 행정형벌 자체의 문제점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의 불균형, 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제3장에서는 유사 의무위반행위간 법정형의 비교 및 예시분석을 통하여 같은 의무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의무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경중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선택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형법상 범죄와 유사한 범죄유형을 두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행정형벌의 정비방안으로 위반행위의 원인 또는 결과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필요성과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기준을 정리하고, 법정형의 균형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제5장에서는 행정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행정형벌의 과잉화를 해소하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간의 균형을 확보할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음

기대 효과

- 행정형벌의 과잉화에 따른 행정법규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행정질서벌과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 기대됨
-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명확화, 법정형의 균형 확보 등 행정형벌규정의 정비가 기대됨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Welfare for
Older Persons in the Aging Society

주제어

고령사회,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위원회제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박종준(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체계의 정비와 의료기술의 진보, 건강 증진 등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그 결과, 저출산에 수반하여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음
 -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부양하는 ‘자립’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함
- 노인복지관련 법제 중 「노인복지법」의 경우 1981년에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나, 기본적인 체계상의 변화는 없음
 - 현행 「노인복지법」은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근거법률로서 기능하여 왔기에 현재의 고령화, 핵가족화, 저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립의 대상으로서 노인의 새로운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이 필요함
- 따라서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소득보장, 경제활동의 기회부여, 보건의료, 주거, 일상생활 및 이동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의 편의제공,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유도 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고령화사회의 현황과 노인복지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관련 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복지에 관한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반영한 노인복지에 관한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아울러, 노인소득, 일자리, 일상생활 및 이동의 편의 등에 대한 법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제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관련 현황 및 정책 분석

-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의의 및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복지의 범주를 검토함. 또한 고령사회 노인복지에 관한 정부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정책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 노인의 일반 특성, 가구 형태, 경제상태 및 경제활동 실태 그리고 건강 및 보건의료 실태 현황 등을 통계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노인복지의 현황을 분석함.

-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

- 노인복지의 헌법상 근거를 찾아보고 이에 기반한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전체 체계를 개관하며, 특히 노인복지 관련 법제에서의 노인의 개념에 관한 규율을 검토함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치매관리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봄

- 주요국의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

- 미국의 경우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s Act)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큰 두 가지 법제 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독일의 노인복지제도는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제3편의 고용촉진, 제6편의 법정 연금보험, 제11편의 요양보험, 제12편의 사회부조(Sozialhilfe)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보장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대책 관련 기본 법률인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일본의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취업, 연금 등 각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함

-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을 위주로 하여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노인소득보장, 노인일자리보장, 노인주거보장, 노인보건의료 등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적 이슈들이 반영된 근거 법제들에 내재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함

기대 효과

- 고령사회의 새로운 수요를 고려한 노인 복지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입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관련 법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복지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고령사회 노인복지 관련 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입법상 연령 기준의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lying Age Standards on Legislations

주제어 연령기준, 아동연령, 청소년연령, 미성년자, 선거권연령, 청소년기본법

연구자 | 장민선(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입법에 있어서 법의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이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 기준으로서 '연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등이 부재함으로써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연령이 규정되기도 하고, 다른 개념에 대해 연령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집행자나 수범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따라서 입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할 때에는 i)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능력이 고려되었는가, ii)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준수했는가, iii) 체계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했는가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상의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의 연령 기준 적용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행법상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연령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토하고, 연령 관련 법적 쟁점 등을 고찰해봄으로써 연령 기준 설정에 있어서 고려사항과 현행법상 연령기준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연령기준 설정의 의의 및 원칙
 - 연령이라는 요소는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된 귀속적 속성으로서, 태어나서 죽을

- 때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권리 행사 또는 의무 이행 등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기준임
- 특정 연령 기준에 해당하면 그 개별적인 사정에 관계 없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연령에 따른 법 적용 대상의 유형화임
 - 입법상 연령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에는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 능력, 수학능력, 경제적 자립능력, 업무수행능력 등이 있고,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공익과 사익간에 비교형량을 해야 하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합성을 준수해야 함
- **현행 법령상 연령 기준의 유형별 검토**
 - 특정한 연령대를 나타내는 개념인 영유아, 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청년, 노인, 고령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조사하여 입법목적과 연령의 관계, 체계적합성 등을 검토함
 - **연령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른 법령 검토**
 - 연령 기준을 법적 성격에 따라 권리 부여 기준, 의무 부과 기준, 자격 취득 또는 상실 기준, 연령등급제, 복지 대상 설정 기준으로 나누어 공통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요소 등을 도출함
 - **연령 관련 법적 쟁점의 검토**
 - 다양한 연령 개념 간의 연령 범위의 중복성 및 동일 개념에 대한 상이한 연령 기준을 검토함
 - 영유아, 아동, 어린이, 청소년, 연소자 등 유사한 개념들의 연령 기준을 비교 분석함
 -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동일한 개념에 대해 법령마다 상이한 연령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함
 - 선거 연령 인하,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노인 연령 상향을 둘러싼 국내외 논의를 검토함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사항 및 연령 관련 법제 정비 방향**
 - 연령 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세가지 원칙에 따라 현행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정리함
 - 연령 기준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능력과 요소들을 도출하고, 연령 기준 설정시 차별금지 등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며, 체계적합성 원칙에 따라 아동, 청소년 등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 특히 아동과 어린이 연령 관련 법제 정비사항을 제시하고, 청소년 관련 법제는 청소년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연령의 조정 및 매체 관련 법률과의 연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함

기대 효과

- 입법상 연령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아동, 청소년 관련 법제에서 연령 기준 정비에 관한 입법 참고 자료로 활용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National Information for
Realization of Government 3.0

주제어 정부 3.0, 정보공개, 공공데이터의 제공, 저작권, 맞춤형 서비스

연구자 | 최환용(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공개·공유·소통·협력이 정부운영의 핵심가치가 되어 하며”, “일방향 소통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3.0시대를 달성”함을 국정최대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며 국가정보의 개방과 맞춤형 서비스를 골자로 하는 정부3.0운영방안으로서 국가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따른 국정운영상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행 관련 법제도는 ① 국가정보의 개방규제, ② 국가정보 공개범위, ③ 국가정보 공유 인프라 구축, ④ 국가정보 융합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⑤ 국가정보 관련 법체계 확립 등에 있어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키워드로 하는 정부3.0의 이념과 가치들을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해보고, 그러한 이념과 가치에 적합한 법제도의 정비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정부 3.0의 의의와 목표를 살펴보고, 정부 3.0의 이념과 가치에 관련되는 법제도를 도출함과 더불어 정부3.0 정책의 추진계획 및 추진과제 등에 대해서 개관하였음

- 제3장에서는 정부 3.0 정책과 관련되는 국가 정보 관련 법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 3.0 정책을 구현함에 있어서 해당 법령들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 등을 고찰하였음
- 제4장에서는 정보공개법령의 정비사항으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개념을 명확화할 필요성과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 공공데이터법의 정비사항으로 공공데이터의 범위와 저작권에 대한 특례의 신설 필요성, 공공데이터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이용조건의 허용을 제시하였음
 - 정보 관련 법제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일원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마지막으로 정보관련 개별법령의 정비방안으로 저작권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공데이터 이용 저해 요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각종 산업진흥법에 있어서 정보 제공 관련 제약 요소들에 대한 정비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
 - 그리고 정보화시스템의 연계·통합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과제로서 사회보장수급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병원기반 사망신고체계 도입방안, 그밖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기대 효과

- 정부 3.0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 3.0 정책에 대한 규범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향후 제도개선과제 도출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연구



Research on the Legislat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주제어 자연자원, 코몬즈, 공동체 관리, 통합관리, 현명한 이용

연구자 | 이순태(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자연자원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관리와 이용은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으나, 자원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이해상충, 자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불균형적 배분, 전근대적 자원관리방식, 새롭게 등장하는 자원에 대한 관리부재 등으로 인하여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별 법률, 예를 들어, 광업법, 온천법, 수산자원관리법, 하천법, 지하수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방식이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관리주체에 관한 내용 등이 관련 법률에 산재되어 있으나, 자연자원 관리정책의 연계성이나 그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방식이 결여되어 있음
-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관리의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각 분야별 개별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법제변화가 다른 분야의 법제와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제의 정비도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제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설정하고, 각 자연자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수법 및 상호연계성 확보를 통해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현명한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개선 방안에 관한 법제연구가 필요함

주요 내용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현행법제
 - 자원관리 법제의 구분
 - 자원관리에 관한 현행법제는 헌법 제120조를 위시하여, 자원의 관리 및 이용, 자원보호 및 절약, 자원의 개발 및 자원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관리주체에 관한 법률들로 구성되어 있음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헌법규정의 변천
 - 대한민국헌법은 경제에 관한 제9장 제120조에서 자원의 관리에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헌헌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내용의 큰 변화가 없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한민국건국강령에서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발견할 수 있음
 - 제헌헌법에서는 자원의 국유화를 규정하였으나, 제2차 개정헌법에서는 '국유'에 관한 내용 삭제되고,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국토와 자원의 이용에 관한 계획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됨
- 현행 법제상 자원의 개념 및 구분
 - 현행 법제상 자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자원을 자연자원, 환경자원, 생명자원, 생물자원, 인적자원, 정보자원, 정보통신자원으로 구분
- 자원관리를 위한 현행 법시스템의 구성요소
 - 자원관리를 위해 현행 법시스템을 구성방식을 살펴보고, 각 자원관리에 관한 법시스템으로부터 상호참조할 수 있는 관리방식이 있는지를 고찰
 - 법시스템의 구성방식을 대별하자면, 기본이념, 자원조사, 관리기본계획 수립,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의 보호·관리협약, 자원이용을 위한 배타적 권리, 관리기구, 보호구역, 보전구역의 지정,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자원조성, 위원회 등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
 - 자연자원은 비소유자원과 공적소유자원을 포괄하는 것으로 하여 논의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의 방식으로서 시장기구에 의한 관리, 정부기구에 의한 관리, 공동체에 의한 관리, 복합적 방식에 의한 관리가 있음
 - 코몬즈론에 있어서 코몬즈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 첫째로 모든 사람의 '공유자원'(토지를 포함) 그 자체, 둘째로 공유자원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소유제도

- 코몬즈의 대상에 그 대상을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비소유인 자원도 인류 전체의 공유재산으로서 일정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 즉 비소유자원의 지구공유자원화를 고려하여 코몬즈의 대상으로 여겨야 함
- 자연자원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 공동체 관리 및 그 개방성 강화
 - 지역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는 종래 지역적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왔던 관습적 권리주체가 담당하여 왔으며, 지역에 정주하는 자연자원의 관리주체가 지속적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공유자원의 유지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관습적 권리주체의 자연자원에 대한 관리가 자원에 대한 접근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관리주체로의 가입에 대한 개방성을 강화하여야 함
 - 실태조사, 자원량 평가 및 통계의 정확성 제고
 -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량, 자원의 이용방식이나 이용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통계적으로 처리된 정보가 정확하여야 함.
 -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평가체제의 구축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용을 위한 자원량이 설정될 수 있음.
 - 통합적 관리
 - 자연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중요한 지식, 정보, 인재 등의 횡단적인 소프트 자원은 시스템으로서 충분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고, 이들을 패러미터로서 지표화하는 것이 중요
 -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에 관한 시스템은 단기·장기, 지역·광역 각각의 규모를 통합한 기술 등의 개발 진행하고, 이를 위해 통합적인 지표의 개발과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학문체계의 구축과 인재의 육성·확보가 불가결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된 연구추진체제를 확립해야 함. 또한 단순한 기술의 개발이 아니라, 제도나 자원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묵시적 관습 등과 같은 문화에 대한 다원적인 시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필요.
 - 자원관리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자원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규제(투입량 규제, 기술적 규제 등)를 위반할 시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적극적 활용이나,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원에 대한 침해정도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이 포함된 다양한 방식의 제재수단도 확보되어야 함

기대 효과

- 자연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연구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것이며, 자연자원의 관리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
-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1인가구사회의 법제연구(II)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ne-Person Household Society(II)



주제어 1인가구, 무연고자, 특별연고자, 성년후견제도, 독거노인, 양자제도, 가족법

연구자 | 이준우(선임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일부 해체되어 사회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되거나 개인으로 남는 사회임.
 -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단계로 각각 단독 또는 구성원의 하나로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전통적 구성체계에서 벗어난 것이 1인가구사회임
 -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가 자기책임과 자기결정의 원리 또는 공동체원리에 따라 규율하던 법률관계가 그 적용범위에 혼란이 발생함.
- 1인가구사회는 가족공동체가 부담하던 부분을 개인 또는 사회공동체가 더 분담하여야만 원활한 법률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임.
 - 이 연구는 1인가구사회에서 제기되는 법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본격적인 1인가구사회의 합리적인 법제도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주요 쟁점으로 사적자치의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 1인가구의 행위능력 보완 내지 지원, 1인가구의 사망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보완, 일상가사 및 생활법률관계에서 작용하는 보호자제도의 보완, 친족을 대체할 연고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관계의 보완 등을 고찰하였음.
- 1인가구의 사망에 관한 부분에서는, 사망의 확인, 사망신고, 시체의 처리,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 1인가구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관계의 청산 등에 있어서 문제점과 보완책을 모색하였음

- 이 부문의 법률관계에서는 1인가구의 연고자 개념 및 역할이 중요한 요소
- 개별법률에서 정의규정을 각기 달리 둔 경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을 분석하여 기준되는 개념 범위, 동일한 연고자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체계화 등을 꾀하였음.
-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귀속은 부동산의 국가 귀속 이외에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등의 귀속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동산 등의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여 무주물 선점 법리로 귀속을 결정하는 한계를 보완.
 - 상속인이 없는 1인가구의 전세금, 임대보증금은 물론 전세권 및 주택임대차의 청산에 관하여 예외적 규정을 두는 방안을 모색.
 - 일반적인 물건의 이용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와 달리, 일방 당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라는 점을 바탕으로 법률관계의 소멸원인으로 명시하고, 예외적인 단독등기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
- 1인가구는 사적자치의 보충 부문에서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사적자치를 확대하고, 실질화하여 가능한 한 1인가구의 의사결정에 따라 법률관계가 규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친족 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등을 1인가구에 적용하는 경우에 후견신청인이 실효성이 적음
 - 생전처분이나 유언으로 미리 결정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재산관리인이나 후견인 등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서 표준계약서, 법교육 등을 통하여 본인을 대리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야 함.
- 공동생활주택 등과 같이 1인가구의 확대로 새롭게 나타나는 목적물 및 이용관계는 1인가구 특유의 문제로 보지 않고 공유경제의 문제로 보아 연구범위에서는 제외. 1인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문제 역시 추후 연구로 제외함.
- 1인가구사회에는 가족공동체를 보완하는 새로운 사회공동체 법리가 적용되거나 개인의 사적자치를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 사망과 후견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공동체의 역할 확대가 필요
 - 생활법률관계에서는 후견에서 더 나아가 보호자의 역할 등을 확대하여 신체 및 재산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

기대 효과

- 개인 또는 가족공동체 중심으로 된 법제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의 흠결 및 불합리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
 - 1인가구사회의 확대에 따른 합리적인 입법 정책 수립과 법제의 확립에 기여



수시연구사업

- 법제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분석
-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 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 일본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휴가·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방안 연구

법제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분석

An Analysis Study about legal institution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주제어 국가경쟁력, 진정한 국가경쟁력,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경제력집중완화

연구자 | 성승제(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가경쟁력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향상시킴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법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 개선에 대한 백년대계 제안
- 연구의 목적
 - 국가경쟁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모색하여, 국가 경쟁력을 진정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주요 내용

- GNP 나 GDP 등 초기 국가경쟁력 요소 소개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 확인
 - 기왕의 국가경쟁력 논의가 주로 기업하기 좋고 편한 순위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음
 - 선진국의 경우 기반구조가 확고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있으므로 피상적인 기업하기 좋은 순위의 국가경쟁력에 집중하여도 된다는 점 때문임
 -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 주요국들이 모두, 빛나는 경제 발전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때문에 매우 취약한 모습임을 개관함

- 취약한 식량자급률하에서 그 식량은 주요 곡물메이저기업에게 의존하며, 미약한 자원부족상황하에서 그 자원은 말라카해협 한 곳을 통과하는 수송로에 의존하고 또한 소수국에게 수입의존도가 과대하여 조그마한 돌발사태에도 치명적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음
-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과대하고, 그 수출은 상대방이 한국에게 별로 의존할 필요 없는 즉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물품들 밖에는 없어서, 선진국들의 수출이 사실상 상대방 수입국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품목들이 많은 것과 대조됨
- 국가경쟁력 개념의 창시자이자 발전시킨 주요 학자인 마이클 포터
 - 그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한국에 대한 어젠다라는 항목에서, 경제력집중완화, 중소기업 보호, 환율절해원화가치 상승, 재벌 규제를 위한 강력한 반독점법 시행을 명시하여 주문하였음
 - 이는 그 동안 널리 알려진 그의 소위 다이아몬드 이론으로 기업 편의 위주로만 연구한 학자라는 상식을 깨는 것임
- 법제 개선 방안제시
 - 필자가 주목한 사항 중 식량 자원 수급 개선의 각종 향방을 다룬 식량기본법과 그 조항들이 필요하고, 적어도 기본적 사항은 입법할 필요 있음
 - 필자가 주목한 사항 중 에너지와 자원 수급에 대해서도 기본법상 적어도 수급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추가할 필요 있음
 - 마이클 포터의 한국에 대한 어젠다를 주목하여 경쟁법과 금융법상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법제개선방안 중 기본적 사항들에 대하여 서술함

기대 효과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 확산과 그것이 법제 개선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등 수급 개선의 기본법에 대한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기업의 사업재편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The Legal Study on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주제어 사업재편, 구조조정, 합병, 주식교환, 지주회사 규제

연구자 | 이준호(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의 중요 테마인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사업재편제도는 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사전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산재된 개별법의 적용으로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움
 - 이러한 배경으로 국회에 입안된 법안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적용을 규정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함
- 연구의 목적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업재편지원법안에 대한 설명과 내용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사업재편지원법안의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내용과 제도도입의 취지를 검토하여, 향후 제정·입법되어 제도로서 운영될 사업재편지원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점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사업재편지원 일반론
 - 사업재편의 의미
 - 사업재편이란, 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한 정도로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식을 변경하는 활동

- 사업재편 관련 유사 법률
 -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산업발전법
- 사업재편지원의 추진체계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기업 중에서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시도하려는 기업
 - 사업재편계획 신청 및 승인
 - 주무부처에 신청 → 주무부처의 검토 →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 → 주무부처의 승인
- 사업재편지원법안에 의한 특례지원
 - 상법에 대한 특례
 - 기업의 소규모 분할 인정
 - 소규모합병 기준 완화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사회 승인 같음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사회 승인 같음
 - 간이합병 기준 완화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사회 같음
→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사회 같음
 - 역삼각합병 도입
 -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 부채비율·주식소유비율 제한, 비계열회사와 자회사 이외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금지 등 사업재편기간 동안 적용 유예
 - 기업실증특례제도와 회색지대해소제도 도입 : 기업이 규제개선을 요청하여 정부가 규제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제도와 법령의 적용유무 등에 대한 확인 요청 제도의 도입

기대 효과

- 입법제언에 의한 관련 입법추진 자료 제공
- 국회계류법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효율적인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Integrated Committee for efficient land use permission

주제어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 통합심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회제도, 절차간소화

연구자 | 박종준(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토지를 이용한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각 개별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이 2015년 1월 20일 부로 제정되어 2016년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은 특히 기존의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들에 의한 개별적인 심의들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러한 통합심의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하지만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신속한 토지이용 인허가 결정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효율성·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주요 규정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 등 하위 행정입법 단계에서 규율가능한 사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규율사항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현행 통합심의위원회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고 통합심의위원회와 각종 개별 위원회의 규율체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통합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조사·검토하여 통합심의제도가 추구하는 제도적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제 정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 통합대상인 위원회가 본래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통합심의위원회 제도 내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실무담당자와의 면담 또는 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설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의 추진 배경 및 의의
 - 통합심의위원회에 의한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심의 제도의 취지 및 주요 내용
-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제도의 수립방향
 -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 제도와 관련한 토지이용간소화특별법의 규율내용 분석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및 행정입법의 가능한 규율범위
 - 통합심의의 절차 및 방식 등과 관련한 법체계 분석 및 행정입법의 가능한 규율범위
- 토지이용 인·허가를 위한 통합심의의 구체적인 규율사항 도출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을 위한 규율사항 도출
 - 통합심의대상으로서 개별 위원회 및 관련 유사입법례 비교·검토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다양한 기준(입법방식, 위원수, 심의대상

의 성격, 공동심의 가능 여부 등) 도출

-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설계방안 제시
- 통합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검토
 - 개별위원회 간 명확한 기능분담 및 효과적인 역할배분을 위한 통합심의 절차·방식 검토
 - 개별위원회의 전문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참여 보장 방안 도출
 - 통합심의 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검토

기대 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토지이용에 있어 특정 분야별로 산재된 개별위원회에 의한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의 유사·중복성 논란, 복잡한 심의절차로 인한 절차지연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심의회에 관한 법정정책적 타당성과 효율적인 제도운동을 위한 세부 법리를 살펴봄으로써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각종 위원회 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유사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위원회 관련 법제의 체계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통합형 위원회 제도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구성·운영되는 개별위원회의 심의절차들을 포섭하여 구성·운영되는 통합심의위원회 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율할 하위법령의 입법 추진시 정책 및 입법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통합심의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서 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통합심의회와 관련된 실무 차원에서 혼선을 최소화하여 법치주의에 기반한 통합심의 업무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 또한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건강한 임신 · 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other and Child Health Act for Healthy Pregnancy and Delivery

주제어 모자보건, 건강증진, 모성, 영유아, 임신신고제도, 모자보건수첩

연구자 | 장민선(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임신부의 산전후의 건강을 관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생아 및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가임 여성들의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포함한 모자보건 정책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됨
 - 모자보건 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은 본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자보건 환경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자보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자보건 관련 수요를 반영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분석
 - 모자보건법의 제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 검토
 -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가족계획사업 실시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모자보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둠
 - 출산 장려라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임수술명령제도, 수태조절 등이 규정에서 삭제되고, 임신 및 출산 신고 제도, 임신부의 산전후 건강 관리, 미숙아 등의 치료 지원, 난임극복지원, 산후조리업 관리 등 새로운 내용들이 규정됨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검토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환경의 변화
 - 초 저출산 시대의 도래, 영아사망률 감소, 모성사망비 증가, 고위험 산모 증가, 청소년 임신·출산 증가 등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 가족계획사업 용어의 존치 여부, 임신·출산 신고 제도의 실효성, 모자보건기구의 역할 제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건강 관리, 청소년 임신·출산 지원 등
-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모자보건 법제 분석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환경의 개선, 임신·출산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됨
 - 소자화대책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계획과 시책들이 수립, 시행되었고, 대부분이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본 모자보건 법제는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복지법과 모체보호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모자보건법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과 대동소이하나, 인공임신중절과 불임수술 등에 관한 내용이 모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모자보건 시책이 적절히 분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일본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모자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특히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면 모자건강수첩 발급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모자보건 관련 국내 법령 분석
 - 모자보건법 이외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영유아보육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학교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아동복지법을 들 수 있음
 - 각 법률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관련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모자보건법의 한계와 개정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음
-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계획사업 등의 용어 삭제
 - 모자보건법의 적용범위를 모성 및 영유아 외에도 청소년과 배우자, 폐경기 이후의 노인에게까지 확대 필요
 - 고령 임신부 증가 및 여성 건강의 악화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집중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 모자보건 정책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모자보건 통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

기대 효과

- 변화된 모자보건 환경 및 수요에 따라 모자보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참고자료 제공
-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 기초자료 제공

한중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upport Measures for Korea-China Industrial Parks and Complexes

주제어

한중FTA,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 전문 분쟁해결기관, 시범사업

연구자 | 김명아(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2015년 10월 31일 한중정상회담에서는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협력을 확인하고, 한중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음.
-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중FTA에서는 경제협력 챕터를 마련하여 지방경제협력과 한중산업단지/공업원에 대한 협력 내용을 정해두고 있음
- 한중FTA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 [한-중 산업단지/공업원]에서는 개발 및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단독 지정됨
 - 2015년 2월 25일 한중FTA 가서명과 함께 발표된 「한중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하여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15년 3월 19일 개최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 방안」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관련 부처들은 후속조치를 마련 중임
 -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내에 설치되는 한중FTA 산업단지는 한중FTA 제17장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임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글로벌경협특구에 적용될 규제최소화, 통관절차 간소화,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의 과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 이에, 한중FTA에 따른 한-중 산업단지 조성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015년 하반기에 한국 산업부-중국 상무부 간 개설 예정인 '산업단지 협력 관련 차관급 협의체'가 개최될 예정임



- 한중 산업단지 추진 방안을 위하여서는 법리적 검토와 정책적 지원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에 따라 조성되는 한중산업단지가 국내법적으로 가지는 법적 지위를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정책과의 비교를 통하여 향후 제도적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함

주요 내용

- 2015년 6월 22일 한중FTA 산업단지 추진지역으로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가 단독으로 결정됨
 - 한중FTA 협정문 제17장 제26조에서는 양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공업원의 설립, 운영 및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는 내용을 두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측에서 지정한 한중산업단지는 새만금 한중산업단지 한 곳이며, 국내 법적으로는 새만금지역에 위치하므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또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규정이 중복 적용되며, 한중산업단지가 지정된 산업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새만금특별법 개정 내지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한중산업단지의 법적 지위와 설립/운영/개발에서의 다양한 조직 및 권한, 이행체계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임
 - 한·중 양국은 제17.26조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의 명칭 및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국내법적 입법과 정책 수행을 통하여 그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등 유사 정책 및 법제와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한중산업단지 조성방안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함
 - 국내외 각 특구 및 산업단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국가 전략적 자원에서 지역 간 연계와 특성화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새만금이 가진 입지조건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새만금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완화 방안 실행 노력 외에도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되는 높은 수준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국가간 산업단지 개발 및 운용 경험이 풍부하므로, 한중/중한 산업단지 추진 및 운영 시 중국의 관련 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협력 수행에 기초가 됨
 - 중국의 중한 산업단지 추진 연혁과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각 중한 산업단지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의 한국측 요청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의 다른 규제완화지역(특구 등)의 운용 정책과 중한 산업단지 추진과의 관계 검토를 통한 유사 정책 수용 방안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추진을 위하여서는 한중FTA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 운영체계를 협의체별과 연합협력이사회, 양자간 업무위원회, 자문기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이러한 관리주체와 개발주체를 분리하여 추진력있는 개발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또한, 한중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개발기금을 설립하고, 공적 성격을 가진 운영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관협력기금을 설치하여 한중산업단지 추진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는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생산/물류/연구/관광 레저/주거 환경을 모두 갖춘 종합산업단지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수립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한중FTA 제17.3조는 경제협력에 관하여서는 제20장의 분쟁해결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만금 한중산단 개발 및 관리·운영 상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서는 전문 분쟁해결기관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 한중산업단지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인증·검역 표준화, Cold Chain 구축, 원스탑 통관, 창구단일화, 해외직구·역직구 플랫폼 건설, 해외전자결제 수행 등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다양하고 획기적인 규제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한중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만금이 가진 유리한 입지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물류·유통업, 고부가식품산업, 관광·레저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성공모델을 도출해 나가야 할 것임



기대 효과

- 새만금 한중산업단지가 가지는 법적 지위와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한중산업단지 및 중한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에 대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회 경호 · 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National Assembly Security

주제어

국회법, 국회의사당, 국회경호, 질서유지, 국회경호처법,
국회경비대, 국회경찰, 국회경호처,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연구자 | 박창희(파견연구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회의사당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 국회경비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경호 · 경비체제를 검토하여 국회 경호 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한 관계 법규의 제 · 개정 방안을 모색함.
- 연구의 목적
 - 국회 경호 · 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 제안함.
 - 3권 분립 및 국회의 질서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경호의 독립성 · 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칭 ‘국회경호처법’ 제정 방안을 마련함.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국회 경호 · 경비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 국회 경호 · 경비 조직 편제
 - 국회 질서유지제도
 - 국회 경호 · 경비체제의 문제점
- 국내 · 외 관련 기관의 경호 · 경비체제



- 국내 관련기관 사례
 - 대통령경호실, 법원, 행정부(정부청사)
- 외국의회 사례
 -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 국회 경호·경비체제 법제개선 방안
 - 국회경비대 개편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가칭「국회경호처법」 및 「국회경호규칙」 제정

기대 효과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경호·질서유지의 실효성 확보함.
- 국회 경호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관계 법규 개정 시 정책 및 입법자료 제공함.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Act for Operation and Mutual Utilization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Equipment

주제어

국가연구시설, 국가연구장비,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연구자 | 이세정(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국가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과 R&D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의 확대나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R&D 수행에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선진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나, 연구 현장에서는 '경쟁적 구축·연구자 소유' 중심의 문화와 체계적 관리체계 미비 및 전문기술 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비효율적 구축, 관리부실 및 공동활용 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성 부재, 연구자의 외국산 장비 선호 등으로 외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아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나, 국내 연구장비 기업의 영세성,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는 국내 장비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존재함
- 이에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국내 연구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현황 및 관리체계,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표준지침」 등 관련 법령 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현황 및 관리 체계를 분석하고자 함
- 제3장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련 법령 및 제19대 국회 제출 입법안을 분석함
- 제4장에서는 가칭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입법의 기본 방향 및 입법 전략을 제시함

기대 효과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연구장비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Regulations for Promotion of Fintech Industry

주제어

핀테크, 규제개선, 인터넷전문은행, 기술중립성,
보안기술, 금융소비자 보호

연구자 | 김명아(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핀테크 관련 법제도는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된 핀테크산업 및 핀테크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엄격한 금융규제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온 바 있음
 - 일례로 P2P 자금중개회사나 소액금융회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대부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그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기존의 금융 관련 규제 및 입법 체계는 핀테크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되기도 함
- 현실화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기술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핀테크 관련 신기술과 금융혁신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핀테크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과 법제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핀테크는 금융서비스를 IT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며, 핀테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가 확정됨
 - 핀테크산업은 초기의 온라인금융에서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클라우드펀딩회사,

P2P 자금중개회사, 소액금융회사,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 핀테크 업무 범위에 따라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제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우리나라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 방안을 외국의 핀테크 발전 현황과 관련 규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
 -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핀테크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뉴욕금융중심가에서는 핀테크 혁신과 투자 확대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영국의 경우 런던 동쪽에 테크시티를 조성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형 은행 중심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시작으로 금융혁신 정책을 빠른 속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정부는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27일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핀테크산업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함
 - 금융위원회는 기술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다양한 보안·인증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서, 향후 관련 핀테크 기술의 발전이 예상됨
 - 2015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지분 보유한도와 법정 최저자본금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은행의 영업범위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기존의 금융업 관련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현행 핀테크 관련 규제 및 법제에 대하여서는 전지적 사전규제 방식에서 원칙중심의 중간관리·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기로 함
- 국내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정부가 마련한 핀테크 육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범인가 및 시범운영을 통하여 인가기준과 영업범위에 대한 산·관·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가야할 것임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자'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내지 P2P대출이나 소액금융중개의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규제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임

- 외환송금과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액외환이체업' 등록제도를 통하여 핀테크기술에 기반한 업체들의 활발한 참여가 가능할 것임
- 비대면 금융거래 실명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보안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핀테크업체들에게도 금융거래사고방지체계(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를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예금자 및 핀테크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과 가상화폐의 현금화 등에 대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으며, 핀테크 관련 금융분쟁해결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임

기대 효과

-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는 E-Commerce 및 금융투자 원활화를 통한 경제발전 촉진과 투자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이러한 핀테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입법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 focused on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주제어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민법, 사단, 재단

연구자 | 현대호(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사회 수요의 증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단체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허가를 얻어 마치 공인단체처럼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이 증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등록 등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 및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 참여를 증대하고자 함
 -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외국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책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일본의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관련 문제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의 분석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한 허가주의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한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
 - 그 밖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가주의 도입 등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제시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최근 비영리법인(특히, 종교법인)의 등록, 규제 등에 관련한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일본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휴가·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Legal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leave system for Work-Life Balance in Japan

주제어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휴직(휴업), 가족돌봄휴직(개호휴업),
근로시간단축제도, 휴직급여

연구자 | 홍성민(부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해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Work and Life Balance)'을 핵심개혁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 '직장'과 '결혼, 출산, 양육 또는 가족 돌봄'에서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함
 - 이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휴가·휴직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를 포함)가 도입되었으나, 이 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휴직제도의 도입요구가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이에 일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한) 법률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일본의 육아·개호 휴업법제의 현황
 - 장기의 휴업제도(육아휴업, 개호휴업)와 단기의 휴가제도(자녀의 간호휴가, 개호휴가)

- 육아휴업의 경우 임금월액 67%의 휴업급여(6개월까지)와 개호휴업의 경우 40%의 휴업급여
- 파파마마 육아휴업플러스 특례, 근로제한제도(법정기준외, 연장, 야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 일본의 법제 동향 및 정책 분석
 - 일과 개호관련 휴업·휴가제도의 중요성 증대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제도 적용기준 확립 및 재검토
 - 육아·개호휴업법제의 남성근로자 이용 촉진

기대효과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개호휴업법제(근로시간단축제도를 포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입법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육아·개호휴업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주제어 공공기록물, 전자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

연구자 | 손 현(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정보혁명에 따른 전자정부의 등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종이에서 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2006년 전부 개정 및 이후 개정을 통하여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체계의 구축 등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
- 그러나 현행 법령상의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규정되었 다기보다는 종이기록 생산·관리체계를 전자기록 관리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일부 원론적인 규정을 법률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하위 법령에 규정을 두는 등 본격 화된 전자기록물 관리 환경에 맞추어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 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번 연구는 현행 법령상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해 전자기록물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공공기록물 전반에 대한 법제 검토보다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관련 법령상 전자기록 물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미국, 호주, 영국의 전자기록물에 관한 법적 규율 현황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함.

- 전자기록물 중심으로 법령 제·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록물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고, 전자기록물의 공개, 활용, 폐기 등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법률 규정 사항들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를 입법 추진 전략으로 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령(법률 및 하위 법령)을 재정비하는 방안, ②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③ 전자기록물 관리에 관한 별도의 하위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및 입법 추진 방안을 제시함.

기대 효과

- 전자기록물 생산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기록물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입법적 토대를 제공함.
- 생산, 이관, 보존, 평가, 폐기 등 전자기록물 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법제 정비

숙박 분야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연구

Study on legislation for Sharing Economy in the Accommodation Industry Fields



주제어 공유경제, 관광진흥법, 관광산업,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연구자 | 강문수(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계인들의 살림살이가 힘든 가운데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
- 공유경제와 관련, 우리사회에서 논의의 중심에 서있는 대상은 빈방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용자 사이를 매개하는 소위 '통신민박소개업'에 대한 논의
- 이와 같은 형태의 업종에 대한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즉 유사한 업종형태로 정당한 절차 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 문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개인의 방을 빌려주고 과금 하는 형태로 유희자원 활용을 과세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의 모호 등, 업 관련 숙박시설 제공자, 이용자 및 매개업자 간 다양한 문제 발생
- 이하에서는 통신민박소개업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 법제적 개선에 관한 입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본래 의미의 공유경제 개념에 보다 부합하고 관계 국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을 제고함에 목적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적 논의와 그 출현 배경을 개관하여 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공유경제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 우리나라 관광숙박업 분야에 있어 공유경제 활용현황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
- 제4장에서는 현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주요 내용

- 공유경제 개관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의미와 발생배경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유형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 숙박분야 공유경제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관광 숙박업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법제개선방향
 -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공유경제 개념의 직접적 적용형태로서의 관광 숙박서비스 업종으로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적 제언을 제시, 향후 관련 입법화 전개 및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연근해어업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A Research on the Legislation of Conciliation of Fisheries Disputes

주제어

어업분쟁조정, 수산조정위원회, 어업조정위원회,
자율관리어업 협의회, 수산업법

연구자 | 이순태(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어업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확정하기 곤란하며, 또 그 경계를 식별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점, 포획의 대상인 수산자원이 이동한다는 점 등에서 다른 사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이외에도 환경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새로운 유형의 해수면 이용, 수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에 따라 어업별 또는 지역별로 다양한 어업분쟁 발생
- 이러한 분쟁은 사법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사전적이며 대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정식 재판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음
- 이러한 분쟁조정 제도로써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해양수산부훈령에 따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비제도적 장치로서 자율관리어업 협의회 등이 있음
- 수산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에 관한 절차 및 기능,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어업분쟁의 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분쟁조정 근거가 해양수산부훈령이라고 하는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어업분쟁 중 조업구역 등과 관련된 문제는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에 관해서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현행 어업분쟁에 관한 제도적 장치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절차 내지 효력 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연근해어업 분쟁의 조정을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산업법 개정으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두는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 어업분쟁조정 현황과 문제점

- 어업분쟁조정 현황

- 수산업법상의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는 해양수산부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동·서해역별 어업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어업분쟁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자율관리 어업협의회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와 한계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

- 수산업법 제10장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수산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있음
- 해양수산부 훈령인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령 및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하는 공동체에서는 지역간·어업간·공동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적 분쟁 조정을 수행하고 있음

-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의 한계

- 수산업법상으로는 각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의 조정기능이 부여되어 있으나, 어업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어업분쟁의 양상이 시·도나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역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 있으며, 조정위원의 구성이 분쟁조정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한 위임근거가 없어서 어업분쟁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룰 수 없으며,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

-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되었음.
- 법률 제13384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제90조제6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업조정위원회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제8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분쟁 조정)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아니함

- 수산업법 시행령 시안 및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시안

- 시행령 시안

- 중앙수산위원회에 어업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종류, 구성, 사무국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규정

- 어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시안

- 운영세칙의 제명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시안)으로 하고, 제2장에서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기능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동·서해역별로 어업조정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설정하며, 그 구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 제3장에서는 분쟁조정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함

기대 효과

- 어업분쟁의 실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

해양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The Legal Study for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주제어 해양공간관리, 용도해역제, 해양생태계, 해역적성평가, 해역이용협의

연구자 | 최환용(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해양생태계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증가함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 및 개발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 특히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양을 3차원적 공간으로 파악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의 이용과 개발간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정책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을 책정하고, 용도구역제(Zoning)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해양을 공간적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로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하는 용도해역제, 해역적성평가제도가 있으나 해양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해양공간의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제도는 특정개발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적 공간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생태계에 기반한 새로운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응하면서, 각각의 해양공간관리제도간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해양공간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정립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을 연접하는 육지, 나아가 해양의 상공에서 해저까지 3차원의 공간으로 파악하여 다양하게 전개되는 해양의 이용과 개발 및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해양관리수단이라고 정의됨.

- 유네스코 정부간 해양학위원회(UNESCO 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해서 “정치적 접근에 의해서 특정된 생태계, 경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행하는 해양공간에서의 인적 활동의 시간적, 지리적인 배분이라 정의함.
- 영국과 미국에서는 법적 근거 아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영국과 미국의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 관한 정보를 일원화하고, 이를 해양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단순한 정보제공형 계획이 아니라 해양공간계획을 통해서 해양자원의 개발 등 해양이용과 해양의 보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일본의 해양관리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령의 제정 등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양공간계획과 같은 통합적 해양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어려움.
- 해양공간계획은 해역의 법적, 지리적, 문화적인 이해관계(관할주체, 소유권)를 수치적인 지리적 구분(관할권의 경계선)과 더불어 파이프라인, 양식장, 인공어초, 중요항로, 해저유적 등 이용상황과 시설의 해역관리 주체와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장래에 해양의 이용 수요에 대응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양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연안,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법령체계와 항만법, 수산업법, 해상교통에 관한 법제 등 해양의 이용에 관한 법령체계를 ‘해양공간계획’체계에 통섭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
-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해양공간관리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또한 해양수산부내의 항만·수산 등 관련 법령과 계획체계의 통합 내지 연계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다른 기관이 보유하는 해양 관련 법령과의 연계 확보 곤란 등 문제가 있음.
-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근거, 절차와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등 핵심적인 요소만을 제도화하고, 해양공간계획을 통한 해양관리의 편익을 입증함으로써 향후 국민적 공감대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대 효과

-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계획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함.
- 개별·분산적으로 관리되어온 해양공간을 통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형성에 기여함.
- 육상중심의 국토관리를 보완하여 해양을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이론적 기반 조성함.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 해소방안 연구

Study on measures to resolve social conflict factors with operating a compensation system for loss

주제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사회적 갈등, 공용수용, 손실보상

연구자 | 강문수(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공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1960년대~), 공업단지 및 택지개발(1980년대~ 1990년대), 신도시 개발촉진(2000년대 이후)등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공용수용제도는 국가정책 주요 구현 수단으로써 제도적 개선 및 활용 전개
- 아울러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조절적 보상을 요하는 관계 국민의 입장에 있어, 비록 2002년, 이원화 되어있던 보상 법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손실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할지라도
- 이와 같은 법제도의 변천은 과거 우선적으로 개발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수용권행사의 절차적 간소화 및 수용주체의 범위확대에 치중하여 전개 되어진 바,
 - 과거 대형 면적 개발중심에서 점적 개발 그리고 토지소유자들의 실질적 재산권 신장의 확보라고 하는 토지이용패러다임의 변화 및 시장경제적 질서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이 가지는 제도운용에 대한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며, 이는 제도 운영상 협의단계에서부터 이의재결 나아가 소송등 사법절차를 통하여 더욱 증폭 되는 현상을 낳고 있고,
 - 이러한 갈등현상은 수용주체에 대한 피수용자, 사업별 성격에 따라 피수용자 및 지역 주민 간 그리고 경우에 따라 환경문제의 경우에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견을 가진 집단 간 분쟁으로 발현
- 이는 사회 통합적 관점은 물론 무엇보다 국가행정-관계인 간 신뢰를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 확대 및 이의 신속한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 현행 공용수용 손실보상제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의 법적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에 목적

범위 및 방법

- 연구목적에 상응하는 연구추진을 위하여 본 연구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법 정책적 연구, ④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
- 특히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
- 주요연구 내용으로서는 제2장에서 공용수용 손실보상 개념 및 법적·실무운영적 측면에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손실보상제도의 신경향으로서의 손실보상 범주 확대화 경향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 손실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제시

주요 내용

- 손실보상제도의 개념 및 제도 운영 현황
- 손실보상 범주의 확대화 경향
- 손실보상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용수용 시 공공필요성 요건 검증 미흡
 - 토지 보상액 산정기준 비 현실화
 -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를 본질로 하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 생활보상제도의 비 효율성에 따른 추가적 국가재정 투입
 - 기타 주요 고려사항

기대 효과

- 본 연구는 공용수용 손실보상제도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법적 - 실무적 검토에 근거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향후 관련 입법화 및 연구 등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



일반연구사업

- 지역법제연구사업(X)
- 입법평가연구사업(IX)
- 법제교류지원사업(VIII)
-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VI)
-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
- 법제분석지원사업(IV)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지역법제연구사업(X)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글로벌(글로벌과 로컬)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권이 국가의 틀을 넘어서 지구 규모가 되고, 동시에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 국익을 초월한 이익실현이 요구되고 있음
- 한편, 국가에 대해서 지역성의 회복, 지역의 독자성의 요구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졌으며 또한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에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음
- 세계 각 지역의 법제에 대한 조사·분석은 우리나라 법제연구와 입법활동에 필수적인 사항이며, 특히 2013년 신정부 출범이후, 정책분야와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역법제의 조사·분석 필요성이 부각됨
- 세계 각국의 법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그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과제별 연구시스템 구축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제공하고, 각 지역의 법제 및 최신법령정보의 수집, 제공을 통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외국법 연구 결과물은 정부의 입법지원에 기여함
- 국내와 국제 이슈의 접점이 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수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정부의 입법지원을 위한 지역별 외국법제 조사를 확대하며, 국내 및 국제 비교법 연구의 HUB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기반을 조성함

주요 사업 내용

연구 사업	중점 과제	투명한 사회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안전한 사회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발간 사업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신외국법제정보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국법제 동향에 관한 정보 수요를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기간행물로서 2007년 창간된 이래 9년차에 이르는 비교법제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발간사업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글로벌 연구위원의 연구 활동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원의 간접적 홍보수단으로서 위상 제고 ● 국제영문저널(KJ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각국의 Law와 Legislation 관련 이슈와 동향에 관한 분석 및 비교법적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하여 외국의 Law와 Legislation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의 정책 및 입법 수립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제 전문 영문학술저널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KJLL)」의 발간 사업을 진행
	기념 발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법 연구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법제사업(구 비교법제사업) 10주년을 맞아해 기존의 사업성과를 집대성하고, 향후 비교법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비교법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서를 출간
협력사업	학술대회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법제연구원-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국제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 • 일시 : 2015. 6. 19. • 장소 : 중국 청도시 향도 행정호텔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기념 공동국제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 일시 : 2015. 9. 3. • 장소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 한국법제연구원 25주년 및 비교법제연구사업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입법적 과제 • 일시 : 2015. 10. 15. • 장소 : 더팔래스호텔 서울 다이너스티홀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배경 및 목적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정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식품·위생·치안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할 것이고, 정보공개 대상기관 및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임. • 이를 위해 정보기관 대상기관 범위를 현재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을 넘어서 위원회·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 그럴 경우 정보기관 대상기관의 수는 현재 30,510개가 32,260개로 확대되어 총 1,750개가 늘어날 계획임. • 또한 정보공개 대상도 목록만이 아닌 원문까지 공개해 매년 1억건 정도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해갈 방침임. ● 또한 정부가 2014년 발표한 '9대 핵심 과제' 중 1순위는 '공공 부문 개혁'이고 이를 위한 4개 개혁방향은 ▲정보 공개 확대 ▲부채 감축 및 방만 경영 개선 ▲생산성 제고 (기능 점검) ▲임원 보수 조정 등이었던 만큼, 정보 공개 확대는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 개정된 이후 수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왔으나, 대부분 타법 개정이었음. • 따라서 공공부문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공개 현황 및 정보공개 담당 조직, 관련법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정보공개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p>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	<p>김현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공직자부패 방지 가이드, 국가청렴위원회, 2007)로서, 부패의 발생영역 또는 독특한 행위양태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가 결정됨 ●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란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의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 특히 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며, 건전한 활동의욕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패행위 조사기구의 미비, 부패 예방의 한계와 처벌(규제)의 단순성, 신고자 보호 수단의 부족, 공직윤리 및 부패행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 또한, 공직부패 종합대책으로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소위 김영란법)이 발의되었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률안 처리절차 중에 있으며 다수의 쟁점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법안이 통과되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개별법적 논의가 아닌 법 전반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법제도의 체계적인 준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시점이라 판단됨 ●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공직자의 윤리와 개별 부패(금지)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의 입법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투명한 공직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p>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p>	<p>이상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기존 원자력법의 분법을 통하여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은 기술적 안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그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대의 복합적 재난환경을 고려하면, 사고 및 피해의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이 연구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총 8개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p>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p>	<p>나채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90%에 달하고, 70-80년대의 급속한 도시화로 부실 건축물과 노후화로 인한 붕괴 등 안전이 문제되고, 특히 도심의 고층 건축물과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나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음. ● 건축물의 설계 및 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위험 요인을 분석 및 평가하여 사전안전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미흡한 상황임.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구조안전, 대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기준에 따라 설계자, 감리자, 구조안전기술사 등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진단, 평가에 의존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을 종합적으로 사전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건축행위에 앞서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건축계획과 건축행위가 연계되도록 하여 계획단계에서 사전적 안전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건축허가 전에 해당 건축물과 인접대지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노후화된 부실건축물 등 안전유해시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개별 부실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설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 중첩되고 적용대상의 중첩과 안전기준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을 개정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지원, 안전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근거가 마련되긴 하였으나, 대상 시설이 제한적이고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의 요청이 전제되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체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안전관리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건축물 안전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주요국가의 건축물 안전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행 건축물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여 법제개선과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	--

기대효과

- 지역별 입법정보 및 법제현안을 지역별 ·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정부 입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투자 및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함
- 각국의 법령, 판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의 관련 지침 또는 협정, 보고서(Report) 등의 정보를 수집 · 정리하여 DB를 축적하고, 이를 번역 · 분석하여 정부,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세계적인 법령정보 수집 및 연구의 HUB로서의 기능을 담당
- 국제학술행사 및 국제공동연구 진행을 통하여 비교법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학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된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입법지원 및 정책지원 기능 제공
- 해당지역 국가의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자료의 축적, 인적 · 물적 교류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류대상국가 확대 도모
- 해당지역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법령정보 제공 및 법제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함
- 전세계 모든 법역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및 외국의 비교법 분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HUB 법제 연구기능을 담당함



입법평가연구사업(IX)

필요성 및 목적

- 입법의 효율성과 규범성 강화
 - 현대 입법에 있어서 나타나는 과도한 입법의 홍수는 입법의 비능률과 비효율을 발생하게 하고 있으므로 입법평가를 통한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과도한 규범은 규범에 대한 강제성과 효과성에 있어서 수범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며, 규범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규범거부현상 또는 무시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통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규범적 평가를 입법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입법절차에 있어서 입법 거버넌스의 활용
 - 현재 입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규율하는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은 입법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공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 입법의 객관화·과학화를 통한 입법선진화
 - 입법에 나타나는 과도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입법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객관화·과학화 유도
 - 입법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와 이해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규범성의 강화를 통한 입법의 신뢰성 확보
- 경제적 평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입법정책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지원함
- 법사회학적 평가를 통한 규범과 현실적합성의 강화
 -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 법사회학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규범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수범자 중심의 입법정책 마련에 기여함
- 입법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조정과 국민의 입법참여의 강화
 - 입법평가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여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반국민의 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입법기능의 강화에 기여함



주요 사업 내용

연구사업	중점과제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I
	수시과제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품인증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입법평가 툴킷(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
발간사업	학술지 「입법평가연구」 제9호 발간	
	이슈페이퍼 발간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성과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경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작은도서관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번역자료집 발간	(프랑스보고서)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개혁에 관한 정부제출 법률안 영향평가	
	(독일서) 입법 : 의회, 행정 및 사법적 통제를 통한 법정립	
	(독일서) GUTE RECHTSETZUNG(좋은 규제)	
	(EU 지침서) Better Regulation Guidelines(규제개선 가이드라인)	
연구협력사업	국내외 학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북유럽 국가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일시 : 2015. 11. 24. • 장소 : 밀레니엄 서울 힐튼 아트리움 ● 한국법제연구원-한국국가법학회 공동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 일시 : 2015. 12. 16. • 장소 :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배경 및 목적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1	차현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의 분야별 대표조례에 대한 조례 입법평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의 적합성 확보·실효성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상 조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 입법평가 기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조례 입법평가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례 입법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스웨덴 입법평가의 적용과 실제에 관한 연구	배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웨덴 역시 유럽 내 규제개혁흐름에 영향을 받아 규제의 양적통제 뿐만 아니라 질적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음 스웨덴의 사후적 입법평가는 해당 법률에 평가조항이 규정되어 있거나 재정영향에 관한 사후 감독적 의미의 평가와 같은 부분적 영향에 한해 단편적으로 실시되는 반면, 사전적 입법평가는 법률안의 작성 및 준비과정인 입법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 입법평가과정에서 기능적 협력구조와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한다면 국내 입법평가제도 도입 시 개별 영향평가의 통합문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제품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 인정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백옥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법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 전체적인 적합성평가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험인증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표준기본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한 법률임 「국가표준기본법」은 최근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법률임은 물론,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검토되고 있는 시험·검사·인증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필요함 또한 기본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해, 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기본법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평가 방법 및 대상 • 기본법의 특성 및 유형을 분류하고, 사후적 입법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여, 기본법의 사후적 입법평가에 필요한 입법평가방법을 도출하도록 함 • 「국가표준기본법」 전체에 대한 입법평가가 아니라, 기본법 내에 포함된 규정 중 적합성평가체제에 관한 조항 일부를 평가하도록 함
<p>입법평가 툴킷 (Toolkit) 개발에 관한 연구</p>	<p>윤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의 위기 또는 실패 현상을 막고 국민이 잘 지킬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령안이나 법령이 미치는 포괄적인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평가하는 입법평가제도 구상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시점임 ●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각국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평가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입법 관련 평가 제도가 개별적으로 분산 도입·시행되어 온 결과, 입법 관련 평가기준이 중복되거나 평가 상호 간 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고, 정부입법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정책의 법제화를 지연시키며, 주무부처의 입안 부담과 평가비용을 증가시키고 평가기준과 기법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외국의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적·비용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절차와 입법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므로, 우선 현재 입법과정에서 실현가능한 입법평가제도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 ● 입법평가제도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입법평가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툴킷 등 입법평가 담당자들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도구들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입법평가(영향평가) 툴킷 또는 체크리스트 등을 분석하고, 국내 입법과정 내지 입법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툴킷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함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입법학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고, 학문적 영역을 확대하는 기여가 예상됨
 - 인접·유관 학문 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사회과학은 물론 입법관련 학문분야의 학제간 학술연구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가입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집행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함
 - 입법의 준비 및 시행과정을 비용과 효용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입법의 합리화와 과학적인 입법의 제도설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함
- 기타 기대효과
 - 입법평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입법정책의 공고화를 이룰 수 있음
 - 수범자 중심의 법제를 통한 보다 현실적합성이 높은 법률을 창출하여 국민의 법률 생활의 혼란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함



법제교류지원사업(VIII)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은 서구의 정책과 법제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를 국내 상황에 맞도록 수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경제개발과 법제선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글로벌사회의 한국법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적·민주적 발전은 신흥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법제 분야 발전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인식되고 있음.
- 향후 선진적인 정책과 법제를 수용하고자 하지만, 경제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일부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들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요청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따른 법제교류협력의 역할도 상당부분 인식되고 있음.
- 한국법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sia Legal Information Network)의 지속적 운영 및 그 밖의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법제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움.
- 법제교류지원사업에 기반한 법제발전경험공유를 통하여 법제지식전수사업으로서의 국내 관련기관 및 ALIN과 그 밖의 대상국과의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각국의 한국법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한국법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글로벌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정보교류네트워크를 지원하고자 함.

사업목표와 추진전략

사업
목표

한국의 경제발전 법제전파와 대상국 법제 수요 지원

추진
전략

- ◇ 한국의 경제발전 및 개발법제 전파 방안 수립
- ◇ 대상국 법제 수요 지원전략 마련
- ◇ 법제교류지원 수행을 위한 국내적 협력기반구축 사업의 시행



주요 사업 내용

아시아법령정보 네트워크(AL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IN 회원기관들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ALIN을 아시아 지역 내 대표적인 연구 협력·지원 네트워크로 성장시키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Study on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 A Comparative Study on ICT Laws in India and Korea ● 韓中遺傳資源法制比較研究(한중 유전자원법제 비교연구)
법제교류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 ALIN을 기반으로 하는 영역을 확장하여 영미권, 유럽권 등 새로운 법제교류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Issues in Korean Law ● Overview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South Korea ● Supporting Laws for Developmental Stages of Small-Medium Enterprises in South Korea ●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 韓國的外國人投資法律解說(한국의 외국인투자법)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배경 및 목적
1	A Study on Laws Related to Social Economy	박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고 개발 계획을 설정,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이와 함께 필연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에 동반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 ● 유럽과 북미 국가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법제화되었지만 아시아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 관련 한국의 법제를 분석, 평가하여 한국의 경제성장과 법제를 모델로 삼으려는 국가의 기관에 제공함
2	A Comparative Study on ICT Laws in India and Korea	최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ynamics of ICT laws were substantially changed after the inclu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WTO. From mere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WTO-TRIPS classifi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s in many other forms, which caused changes of regulations on overall ICT laws. ●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ill be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CT laws IPR for Economic growth and how far it can be balanced with public interest.
	韓中遺傳資源法制比較研究 (한중 유전자원법제 비교 연구)	이상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제10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발효함 ● 한중 양국은 나고야의정서 비당사국이라 하더라도 국가 주권 아래 놓여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이하 ‘ABS’) 관련 법제는 이미 존재함. 나고야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양국 관련 법제가 더욱 보강, 체계화될 것임 ● 한중 양국의 유전자원 법제 현황과 예상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유전자원 관련 법제 강화 방안을 제시함
4	Current Issues in Korean Law	이상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헌법, 행정법, 형법, 상법, 민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국제통상법 등의 각 분야별로 한국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조사 연구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법제를 소개하고자 함
5	Overview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South Korea	김형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study was carried out as part of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s legal exchange research proj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legislative history of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s to share Korea's legislative development experienc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6	Supporting Laws for developmental Stages of Small-Medium Enterprises in South Korea	최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th the accomplishment of the rapid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decades after the Korean War, Korea has been set as one of the model countries to study and to benchmark for development by many Asian countries. As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taking the majority of the economic vehicle in Korea, reviewing and sorting ou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SMEs would certainly shed lights in assessing effectiveness of those laws. ●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s of SMEs, each supporting law's specific provisions and their effectiveness are reviewed and assessed
7	韓國의外國人投資法律解説 (한국의 외국인 투자법)	이상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는 한중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할 것임에 따라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밀접해 질것으로 보여짐. 최근 중국의 정부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인 투자자의 우리나라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법체계가 혼란하여 정확한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서 설문조사되고 있음. 특히 산재된 외국인투자관련법과 제도, 투자절차, 인센티브제도, 사후관리제도, 중앙법률과 지방 조례의 관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인의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정확한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여 투자계획 수립과 우리나라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투자유치 업무에 유용함을 제시하고자 함

8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박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이 하게 됨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그 소개가 부족하여 법제정보교류가 어려운 실정임 ● 이 연구는 우리 법제를 보고서 등에 어떻게 모듈화하는 것이 대상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	-----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아시아 법제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음.
 - ALIN 회원 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공통적 문제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체제의 구축과 연구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임.
 - 우리나라와 교류대상국의 정부 각 부처, 법제실무자, 기업,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법제정보와 관련지식을 제공하게 될 것임.
 - 그 밖에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의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임.
- 기타 기대효과
 - ALIN 각 회원기관 또는 각 국의 회의 참여기관의 수도 증가하여 ALIN의 국제적 지위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ALIN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시적인 ALIN 활동의 추진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회원기관 간 법제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음.
 - 교류대상국과의 법제교류지원을 통해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국가 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기반을 조성할 것임.
 - 지금까지 주로 선진국들의 법제를 수입해 왔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제를 세계화시키는 이른바 '법제정보발산국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VI)

필요성 및 목적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제는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임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의 국제협약(2013년 현재 195개국)이고, 이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이슈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논의는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주제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역할이 가능한 우리나라는 관련 이슈의 선도를 통하여 국격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현안임
-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법제정비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의 추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됨
 -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추진은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및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예정으로 인하여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에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분야 연구 및 사업 진행이 요구됨
- 본 연구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자 국정 목표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①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공약의 이행, ②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③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적 기후자원 공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도출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건전한 환경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제는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임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대의 국제협약(2013년 현재 195개국)이고, 이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기후변화이슈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논의는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주제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가교역할이 가능한 우리나라는 관련 이슈의 선도를 통하여 국제협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현안임
- 우리 정부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법제정비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의 추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됨
 -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추진은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및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예정으로 인하여 한층 더 가속화될 전망에 있어,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분야 연구 및 사업 진행이 요구됨
- 본 연구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선도”하고자 국정 목표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①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공약의 이행, ②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③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적 기후자원 공여자로서의 역할 강화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도출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건전한 환경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사업 내용

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onesia's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y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가의 에너지효율화 법제와 정책 ● EU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정책에 관한 연구 ● 에너지가격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연구 ●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 할당 후 조정·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법제연구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II)
연구사업	<p>〈기후변화법제포럼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포럼(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기후변화적응정책 현황 및 향후 전망 (박창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이미숙 창원대학교 교수) ● 제2차 포럼(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우리나라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명수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한국기업의 기후경쟁력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 제3차 포럼(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기후변화법제이슈-2014년 기후변화법제포럼의 논의정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시장의 불공정거래규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제4차 포럼(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탄소배출권 파생상품의 필요성 및 현물거래 활성화방안 (김태선 글로벌탄소배출권연구소 소장) • 제2주제 : 탄소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5차 포럼(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탄소배출권 시장동향 및 추진과제 (정석호 한국거래소 부장) • 제2주제 : ETS 시장안정화 방안 연구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



연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포럼(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What is Wrong in Fossil Fuel Prices in Korea?: Diagnosis and Treatment (김성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우리나라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 (이지웅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7차 포럼(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주제 : CCS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대안인가? 법적 쟁점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합의문의 법적 형태와 주요 쟁점 - INDC를 중심으로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환경경제학회 공동학술회의 <p>주 제 : “저성장시대의 환경과 복지”</p> <p>일 시 : 2015. 8. 28. - 29.</p> <p>장 소 :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p> ●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환경법학회 공동학술회의 <p>주 제 : “정보화시대에 환경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p> <p>일 시 : 2015. 9. 12.</p> <p>장 소 : K-Hotel(서울 양재동)</p> ● 제4회 Asia-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 <p>주 제 : “Climate Change and Effective Actions in Asia-Pacific”</p> <p>일 시 : 2015. 10. 22. - 23.</p> <p>장 소 :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p>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배경 및 목적
1	Indonesia's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Policy	박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es and laws of Indonesia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Assessment of polices and laws of the climate change in Indonesia will provide us the information on tasks and positions of Non-Annex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arena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가의 에너지 효율화 법제와 정책	홍의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 지침, 독일, 프랑스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법제 그리고 그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체계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3	EU 배출권 거래제 시장 안정화 정책에 관한 연구	김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월 이후 약 5개월간 배출권 거래량의 부진과 최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하향 조정에 따른 배출 허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활성화 및 시장 안정화 제도 도입 마련에 기여 ● 최근 EU 등 주요 국가의 정책과 제도 등의 분석을 통하여 해외 동향 파악 및 제도적 시사점 도출
4	에너지가격 규제에 관한 법·경제적 융합 연구	김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들에서 환경보호,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목표들을 제시 ● 국내의 에너지가격은 물가안정, 수출기업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면서 왜곡현상이 심화되어 왔음
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조례안 연구	이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적응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기후변화적응 조례의 제정이 각 자치단체별로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될 것이므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반영하고,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표준조례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6	영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민사소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연구	최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시 초기시점이기도 한 현재, 탄소배출권 할당과 관련 일부 기업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음. 현재는 할당분야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다른 유형의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민사소송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질 수 있음 ● EU내 주요 국가인 영국은 동 제도 시행 초기 탄소배출권 할당에 관한 소송이 있었으나, 현재는 할당 분야에 대한 소송은 희박하며, 배출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영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민사소송 분야 사례분석은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예측해보고, 필요시 입법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가치가 있음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박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제1차 온실가스 배출권 국가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함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결정된 이래 중요한 쟁점은 온실가스 배출 총량 결정 및 거래제 도입을 위한 할당방식, 할당량, 할당 대상 등에 집중됨

	- 배출권 할당 후 조정 · 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할당계획의 수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쟁점인 배출권 할당의 조정 및 취소를 중심으로 수행함
8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에 관한 비교 법제연구	박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4월, 상쇄배출권이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함 ● 우리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이 시장에서는 동등한 가치로 거래될 수 있으나, 각 배출권의 발생 기원 및 특성, 배출권의 전환 등에 있어 상쇄배출권과 할당배출권은 다른 연원에서 시작됨
9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분석(II)	이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수단 중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중 덴마크 ·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정책 및 지속가능한 환경조성과 관련한 연구에 활용도 높은 기초자료를 제공
- 국제사회의 주요이슈 중 하나인 기후변화대응정책에 관한 합리적인 입법지원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제고
- 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방향 및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의 국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공
-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추진 현황 및 법제도 정보를 신속히 분석하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수립에 참고자료 지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 글로벌 미래법제전략과 FTA법제전략 연구를 통한 글로벌 대응법제 전략 구축
- 우리 법제의 글로벌화에 관한 논의는 로컬의 글로벌화 논의와 글로벌의 로컬적용의 문제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면서 법제의 글로벌화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서 출발하고 있음
 - 전지구적 문제의 세계적 논의과정에 나타난 법제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연구성과의 공유와 확산
 -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법제분야의 역할 제고
- 전지구적 미래의 문제인 식량(food) · 물(Water) · 에너지(Energy)와 같은 글로벌 생활 환경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금융 위기, 경제위기, 전쟁과 같은 지역적 문제의 지구화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 국가적 법제분야 대응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의 법제분야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우리 법제의 기반을 글로벌법제 논의의 주제로 제공하고자 하는 연구공조 등의 역할을 수행
 - 법제분야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사회 변화 추세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법제 전략을 모색해보는 선도적이고 능동적인 법제 전략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사업은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rt, 미래법제전략연구 Part, FTA법제전략연구 Part로 구분하여 UNCITRAL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법제에 관한 전략적 연구, 개별국가간 현안법제 대응연구로서의 FTA 대응을 위한 법제전략 연구 등을 진행하고자 함.
 - 국제기구 공동연구는 글로벌 이슈로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의 규범화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의 정책과 제도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로 진행
 - 미래전략연구는 우리 법제가 국가정책의 미래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법제에 관한 전략적 방향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
 - FTA법제전략연구는 우리 정부가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법제적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사업 목표 및 추진 전략

추진 목표 글로벌 미래법제연구와 FTA법제연구를 통한 글로벌 대응 법제전략 기반 구축

추진 전략

- ◇ 글로벌 법제이슈 발굴과 대응을 통한 법제전략 기반구축
- ◇ 글로벌 미래법제 연구를 통한 법제전략 기반구축
- ◇ FTA법제연구를 통한 글로벌 법제전략 기반구축

추진 방법	Global Joint Research	글로벌 미래법제 전략연구	FTA법제전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 현안대응 연구 ● 국제기구 및 지역기관과의 공동연구 ● 현안 분석 연구 ● Global Legal Issue 발간 ● 10여개 국제기구 법제 이슈 모니터링 ● Expert Forum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 UNCITRAL, OECD 등과 공동 개최 ● FTA 관련 국제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전략연구 ● 개별 글로벌 대응 법제 분야 전략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을 통한 법제전략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중장기 글로벌 미래법제 연구방법론 구축을 위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이행법제 연구 ● FTA 개정현상 분야 연구 ● 해설서 및 분쟁사례 분야 연구 ● FTA 법제전략 수립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FTA 협상 실무지원을 위한 정책실무협의체 구축

주요 사업 내용

연구과제	Global Joint Reseach	신소재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글로벌 법제현안 분석연구
		특허과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글로벌법제 현안 분석 연구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

연구과제	글로벌 미래법제 전략연구	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1) - 원자력·식품분야를 중심으로 -
	FTA 법제전략연구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연구관련 분야	번역사업	Energy Law in Korea
		Building Law in Korea
	발간사업	Global Legal Issue 2015 발간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5 UNCITRAL Asia Pacific Songdo Spring Conference 외 8건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배경 및 목적
1	다국적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글로벌법제 현안 분석 연구	류성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법제현안인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인권경영 기준과 지침에 관한 논의 등을 분석하여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자 함
2	신소재 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글로벌 법제현안 분석연구	왕승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법제현안인 신소재식품의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조성과 관리상의 안전보장에 관한 법제화 방안 연구
3	한-중 FTA 분야별 법제이슈 분석·연구	이기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중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제분야 이슈 분석 및 분야별 법정정책적 시사점 제시
4	미래 특수분야의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전략 연구(1) - 원자력·식품분야를 중심으로 -	김중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 특수 분야에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법제, 식품안전관리법제 등의 현행 관련법제를 검토함으로써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수 분야에 안전 법제 전략 방안을 연구



5	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 한 의료기사법제 개선 방안 연구 -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	이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의료민영화 및 의료개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분야 대응연구
6	이민법 제정을 위한 글로벌 미래법제전략 연구	강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외국인 체류정책의 정책적 변화를 입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정책 집행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법 제정방안을 중장기 법제전략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함
7	특허괴물(NPE)에 대한 규제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김형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법제현안인 지적재산권 분야 주요국(IP)의 특허괴물 규제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입법 및 규제 조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기대효과

- 우리 법제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아젠다 및 법제 동향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정부 입법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미래대응 법제전략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법제 도약의 초석을 제공
- FTA법제전략연구를 통하여 우리정부의 효과적인 FTA 정책 추진을 지원하여 FTA 체결이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후생증진에 기여



법제분석지원사업(Ⅳ)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지식정보사회로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전문화·세분화된 입법정보의 요구와 다양한 국가현안에 대한 입법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그에 따라 국회에 접수되는 법률안의 수도 급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현행 관련법제 분석, 유사 외국 법령에 대한 비교분석, 법률안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법리적 분석 등 전문적인 법제분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국가차원의 입법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의원입법안과 정부입법안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제분석 없이 법안이 가결될 경우 법령 간의 충돌 및 부정합·피규제자의 순응도 저하·법집행상의 문제 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사회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는 즉각적인 입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주요 국가현안을 중심으로 입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제분석지원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법제분석지원사업은 국가 차원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현행법제분석, 외국법제분석, 법률(안)분석 등 다양한 유형의 전문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국가주요현안에 대한 법제분석 수요에 부합하는 법제분석지원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하고 정책의 선진적 법제화 및 입법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연구추진방법

- 다양한 통로의 수요 파악 및 다양한 유형의 법제분석지원 제공
- 다양한 연구방법론 활용
 - 수요처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론 적용
 - 법정정책학적 분석, 비교법분석, 법체계성·정합성 분석, 법사학적 분석 등
-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정기 개최
 - 분야별 법제현안 간담회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상시 현안 논의
 - 과제별 워크숍, 전문가회의, 학술회의 등 개최
 - 원내 전문인력 및 Global Network 활용
 - 분야별 전문연구기관, 관련학회 등과의 협동연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신청기관	연구책임자
1	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이서영
2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농림축산식품부	장은혜
3	법령상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이유봉
4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국회	조용혁
5	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	행정자치부	이준호
6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국회	이유봉
7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인사혁신처	전주열
8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양태건
9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우정사업본부	김지훈
10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분석 -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최경진
11	무인항공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서울특별시의회	임 현

● Issue Paper

	연구과제명	신청기관	연구책임자
1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국회	최환용
2	국군포로가족 지위에 관한 법제분석 연구	국방부	강현철
3	외국의 숙박업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전주열
4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행정자치부	조용혁
5	수난구조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국민안전처	장은혜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다양한 분야의 입법수요에 맞추어 여러 방법론을 활용한 전문적인 법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행정법 분야의 학술 발전에 기여함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국가 차원의 수요에 부합하는 법제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책의 선진적 법제화 및 입법의 질 제고에 이바지함
 - 한국법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연구기관, 학회 등의 상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전문적인 연구네트워크에 기초한 입법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함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필요성 및 목적

- 가용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북한 법령 및 연구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DB 구축,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행복한 통일시대 구현에 이바지함
- 남북한관계는 수많은 사건과 난제들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를 극복하고 쌍방간에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모색
 - 남북한관계 및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전개양상을 감안할 때 통일에 대비한 법제 연구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핵심과제로 부각
- 북한 및 통일법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법제에 대한 자료 축적과 연구, 남북한 법제 비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법제 연구 등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다가올 통일시대를 맞아 직접적으로 적용될 법제와 남북법제의 통합을 전제로 한 연구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국가적인 과제를 앞두고 그동안 축적한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통일법제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각 부처의 통일법제 준비작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제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이 시기의 필수적인 의무

사업방향

- i) 분단국 통일사례 및 체제전환국 연구
 - 독일, 베트남, 예멘 등 분단국의 통일사례와 법제연구를 통해 통일 및 법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과 과제들을 분석·정리하여 제공
 -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 구 사회주의권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사례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적연구를 통해 북한지역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법제통합의 기초자료로 활용
- ii) 북한법제 및 법제통합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향후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할 통일대비법제 연구 및 법제통합작업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북한법제 및 통합법제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

- 남북한 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초로 헌법을 비롯하여 통일국가에 적용될 법제의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이에 맞추어 남북한 통합의 각 단계별 법제 로드맵 작성
 - 남북한 법제에 대한 비교·분석을 기초로 헌법을 비롯하여 통일국가에 적용될 법제의 마스터플랜을 구상하고, 이에 맞추어 남북한 통합의 각 단계별 법제 로드맵 작성
- iii) 북한 현행법령 및 법령연혁 DB 구축 및 관리
- 지금까지 북한법령은 북한당국의 비공개로 그 존재 자체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입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 및 연혁 등이 불분명하여 학술적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최근 북한은 법령집을 공식적으로 발간(2004년/2010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특구 개발 및 외자 유치 등의 필요에 따라 기관지 등을 통해 법령을 공개하고 있어 공식적 법령 입수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법령관리에 관한 기술적 미성숙과 체제의 특성 등에 따라 법령의 현행성이나 연혁 등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상황
 - 현재 일부 정부부처 및 언론기관이 부분적으로 북한법령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령의 현행성이나 연혁 등 법제연구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령집 및 연혁법령집 발간과 DB 구축, 영문법령DB 구축 및 관리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북한 현행법령과 연혁법령DB 구축을 통해 북한법령정보의 신뢰성과 현행성을 강화함으로써 북한법제 연구와 통일정책 수립의 새로운 기반을 조성
- iv)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발간
- 정부의 통일대비법제 연구 및 법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기회 제공
 - 축적된 연구성과와 학술회의, 연구논문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통일법제분야 연구 논문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술지 발간
- v) 법제통합을 위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 북한의 법현실 연구 및 법제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한 각종 통계의 조사·수집 및 관리
 - 북한의 법의식과 법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제통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북한 및 통일법제전문가, 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연구 및 결과 공유

주요 사업 내용

통일법제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통일법제연구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법제연구를 위해 필요한 전문적 자문과 사업 수행 협의
	국내·외 통일법제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통일법제 관련 기관 조사 ● 국내외 북한법제 및 법제통합에 관한 기관 및 전문가풀을 구축하여 향후 정부 각 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 정기, 부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네트워크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 국내·외 통일법제 관련기관 회의 개최 ● 통일법제 연구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통일법제 연구 관련기관 간의 연구현황 및 계획을 상호교환하고 향후 조화로운 사업추진방향 협의
	독일 내 통일법제 연구공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심포지엄 개최 ● 주제 : 통일의 법적 문제 (Deutsch-koreanisches Symposium: Rechtsfragen der Wiedervereinigung) ● 일시 : 2015. 11. 11. ● 장소 : 튀빙엔 / 튀빙엔 대학교 법과대학 (Neue Aula)
학술회의 개최	국내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 70년에 이른 지금 남북한에서의 법제 변화와 현실을 조망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함 ● 또한 통일법제 관련 연구기관들의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주제 : 「헌법과 경제통합」 ● 일시 : 2015. 6. 17. ● 장소 :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국제학술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독일 통일시 법제통합과정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입법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함. ● 주제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 ● 일정 : 2015. 12. 3. ● 장소 : 그랜드 힐튼 호텔(서울)
연구과제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주요 연구성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배경 및 목적
1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 법제 연구	박훈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 교류협력 증대과정에서 철도연결 및 통행실시 합의에서 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획득. 남북철도통행 실행을 위한 법령 입법에 기여함. 분단이후 중단된 철도교통의 원활한 재개로 통일의 전단계 내지 낮은 단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간 주요 철도회사의 통합 내지 운영구분 관련 독일의 경험사례와 법제도 변화과정을 분석함.
2	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류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의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교육제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법제적 검토가 거의 결여되어 있어, 통일 이후 교육법제 통합을 고려하는 경우 선행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각종 제도를 법제화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급작스런 통일에 대비하여 통합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북한의 교육법제와 주요 자격제도 및 교육과의 연관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통합법제의 기본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작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남한사회 내의 탈북주민에 대한 학력 및 자격에 대한 인정 문제를 연구하는 편이 실효성이 있음. 연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연구는 북한의 교육법제를 분석함과 동시에 북한의 교육의 실상에 관하여 제시함으로써 통합시에 그 학력, 자격을 인정하는 법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본 연구는 현행 탈북주민의 학력과 자격인정에 관한 주요 문제를 검토하여 이들이 남한 사회 내에서 통합되고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를 하고자 함. 북한의 학력과 자격의 인정에 관한 법제구상 및 양측의 법제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기대효과

-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정부 각 부처의 통일대비법제 연구 및 법제통합 작업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통일과정의 시행착오와 비용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
- 통일대비법제 연구와 법제통합에 관한 연구인력풀을 확보하고,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외곽에서 통일대비법제 연구와 법제통합 지원에 관한 외연을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형성
-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구축,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인적, 물적 통합을 공고히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



수탁연구사업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1	동북아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국제기구로의 승격을 위한 법적 검토	김형건 현준원 이기평 허서희	기획재정부
2	집단에너지 공동주택 열사용시설 안전검사 법제화 연구	김종천 배건이 왕승혜 백옥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	환경분야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비방안 마련	이준서 홍의표 김은정 박기령	환경부
4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관련 법령 정비방안 연구	나채준 박광동 박기령 박훈민	법제처
5	외국법령의 체계정합성 정비방안 연구	이준호 현대호 이세정 손 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식약처 소관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벌 및 행정처분 기준 정비방안 연구	최 유 이세정 배건이 백옥선	식품의약품안전처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	차현숙 강현철 윤계형 최 유 배건이 백옥선 권영호 홍완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	엑셀러레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화 연구	현대호 최지연 박훈민	중소기업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9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 연구	손희두 윤계형 정상우	대통령기록관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10	원자력시설의 전주기적 물리적방호 규제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류성진 이상윤 김종천 백옥선	원자력안전위원회
11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류성진 강현철 최경호	법제처
12	수산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검정 및 평가기준 설정	이순태 강문수 김윤정 박종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13	외국환거래법령의 주요국 입법례 및 체계 개선 연구	현대호 최지연 배건이 문준조	한국금융연구원
14	배출권 할당방식 선진화방안 마련 연구	박종준 현준원 장은혜 최경호	환경부
15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시(市) 소관 조례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이세정 이기평 손 현 장민선 김형건 류성진 김승렬 정 훈	법제처
16	배출권거래제 관련 소송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현준원 배건이 박종준 최경호 왕승혜 홍선기	환경부
17	평택지원특별법 개선을 위한 입법대안 연구용역	강현철 차현숙 김형건 이기평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18	농산물 유통 및 수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지훈 이준호 윤계형 박종준 장은혜	농림축산식품부
19	건축법령 체계 개편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및 분석 연구	김종천 왕승혜 이기평 장원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	문화재 관련 자치단체 위임규제 정비 연구	백옥선 윤계형 최 유	문화재청
2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장원규	제주특별자치도
22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강현철 차현숙 윤계형 왕승혜	법제처 운영지원과
23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연구	성승제 최 유 박종준 강문수	공정거래위원회
24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법령개정 연구	홍종현 김명아 최 유	기획재정부
25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을 위한 “재도전 활성화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기령 이준서 홍종현 김정현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26	민간공간정보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연구	이상모 박광동 최지연 김현희 박순형	국토교통부
27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 높은 법령으로서 법령체계 및 조문구성이 복잡한 법령의 알기 쉬운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윤계형 차현숙 최 유 배건이 백옥선	법제처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28	신항만건설 활성화를 위한 신항만건설촉진법령 전문개정 연구용역	김지훈 최한용 이상모 류성진	해양수산부
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령정비 연구	김종천 이상윤 백옥선 최경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30	방류종묘인증제 인증 요건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순태 김정순 강문수 김명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김정현 이유봉 김현희 나채준	국민권익위원회
32	11개 분야별 부당 표시·광고 심사지침의 개선방안 연구	왕승혜 이준호 김형건 이기평 조성국	공정거래위원회
3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 통상 협정의 노동장 이행방안 연구	김은정 이상모 김명수 이승길	고용노동부
34	고의성 없는 환경오염사고의 형사처벌 적정성에 관한 연구	강문수 이순태 김정순 김명아	환경부
35	SW 안전진단 제도화 연구	조용혁 김현희 최 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6	스마트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한 도로관련 제도개선 연구 - 1차년도	조용혁 김윤정 장원규	국토교통부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37	발전용 바이오중유 상용보급을 위한 법령(안) 마련 연구	김정순 이준우 이유봉 김은정 이종영	한국석유관리원
38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민간시장 참여현황 및 경쟁원리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성승제 이기평 최지연 현대호 이순태	공정거래위원회
39	해상교통관제(VTS)관련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홍의표 이준서 박종준 황문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40	한 - 중미, 한 - 에콰도르 FTA 대비 국가별 지식재산권 제도 연구	김형건 성승제 이기평 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41	“세대주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 등 관련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박기령 배건이 장민선 김미경	여성가족부
4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체계의 재정비 및 합리적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	이세정 강현철 김형건 김윤정 박세훈 백옥선	국토교통부
43	농업생산공간의 변화와 관련제도의 과제	최환용	국토연구원
44	해양오염 방제에 관한 법령 제정안 연구용역	이준서 홍의표 최지연 박종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45	행정협업 관련 법제 제정방안 연구	장민선 권채리	행정자치부
46	증거기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데이터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손 현 정명운	행정자치부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47	원전 계속운전 관련 법령 개정안 연구	홍의표 이준서 박종준 이진수	에너지경제연구원
48	독일 통일 이후 분야별 법제정비 사례 조사 및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정책방안 도출	배건이 손희두 박훈민 이준섭	통일부
49	유라시아 이니셔티브(Е) 추진을 위한 각국의 경제발전법제 비교연구(1) - 중국과 러시아 -	박광동 이상모 최지연 김형건 양효령 Qiang Li 양희철 노영돈 김영웅 장교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0	유전자재조합실험 위해관리 법제도 개선 연구	홍의표 현준원 박기령 장원종	질병관리본부
51	한영법령 표준용어집의 확대, 발전을 통한 법령의 영문번역 기준 마련 연구	정두호 박세훈 공효영 김다정 김빛나 나혜선 배애리 이규란 이은경 이지영 임유경 장희지 정은선 Richard L. Wilson	법제처
52	2015년도 해외경쟁시스템 최신성 유지 용역 사업	윤인숙 이상윤 김명아 장원규	공정거래위원회
53	「수난구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선방안 연구	장은혜 이준서 홍의표	국민안전처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54	EU의 경쟁/소비자법 ·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연구	김윤정 성승제 조용혁 장원규	공정거래위원회
55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 · 제도 개선방안 마련연구	김정순 이준우 박광동 김 진 김현수 이진홍	국토교통부
56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정비방안 연구	이유봉 장민선 김정현 박훈민	인사혁신처
57	국내외 아케이드게임 법제도 연구	박훈민 김정현 김윤정 김현희 장민선	한국콘텐츠진흥원
58	관광숙박업법령(가칭) 제정 연구	강문수 김지훈 손 현 장은혜 전주열	문화체육관광부
59	통합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 연구	윤계형 차현숙 김현희 전주열 양태건	한국스포츠개발원
6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연구	차현숙 정명운 박훈민 김수갑	문화체육관광부
61	산림사업 대행 · 위탁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현희 김윤정	산림조합중앙회
6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제도 및 기준마련 연구	이순태 장민선 이유봉 김수홍	국립수산과학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63	국내 대륙붕 천연가스개발 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방안	백옥선 이상윤 장원규	산업통상자원부
64	국제행사지원 사업군 연구	현대호 김명아 최지연 성승제 나채준 조정찬 문병기	기획재정부
65	해양환경관리법 체계화 및 하위법령안 제정 연구	최환용 이유봉 양태건 류지성 최승필	해양수산부
66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법학적 접근	이준서	에너지경제연구원
67	미국, 영국, 일본의 비법령 금융규제 비교분석	최지연 이준호 박광동	금융위원회
68	등록규제 개선 정비방안 연구	최환용 장민선 조용혁 박기령 권채리	국무조정실
69	석면피해구제제도 구제범위 확대방안 연구	현준원 박기령 장은혜 전주열	환경부
70	사업재편 지원제도 운영방안 연구	이준호 성승제 김명아 김윤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71	2000년대 이후 국내외 통일 연구 분석 및 향후 연구 과제 - 법제분야 -	김정현 박훈민 류지성	통일연구원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자	발주처
72	법과학 원천기술 개발과 수출산업화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김형건 강현철 이세정 왕승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73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법령 정비 및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현 차현숙 박기령 양태건 류지성 박은혜 나종혜	국무조정실
74	간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제명 정립방안	이기평 장원규 왕승혜 홍성민	법제처
75	연육·연도교 건설에 따른 연안여객선의 합리적 손실보상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김지훈 최환용 차현숙 장은혜 전주열	한국해운조합
76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지정체계 개선 연구	김은정 김현희 장원규	예금보험공사
77	최근의 전파이용환경을 고려한 전파관리제도 합리적·효율적 개선방안 연구	김지훈 장은혜 전주열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03 2015년도 주요활동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발간간행물

국제교류 및 학술행사

1. 국제 및 공동학술대회

	일 시	장 소	주 제
1	2. 12(목)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2	3. 13(목)	스웨덴 스톡홀름 법과대학	Better Regulation and Legislative Methods - Focusing on the national status and Achievement
3	3. 27(금)	고려대학교 CJ법학관	규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행정법학
4	4. 30(목)	더팔래스호텔 서울	아시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법과 정책 (Law and Policy on Social Economy in Asian Countries)
5	6. 4(목) ~ 5(금)	송도 컨벤시아	세계 매매법의 조화(Harmonization of Global Sales Law), 전자상거래 경제 : 법률적 로드맵 (Creative E-Commerce Economy: Legal Roadmap)
6	6. 17(수)	헌법재판연구원 대강의실	헌법과 경제통합
7	6. 19(금)	중국 청도시 향도 행정호텔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
8	6. 23(화)	중국 복건성 사먼대학	한 - 중 FTA 법적 과제와 전망
9	9. 3(목)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특별자치 미래를 말하다
10	9. 16(수)	더팔래스호텔 서울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
11	9. 17(목)	더팔래스호텔 서울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공공성 법제
12	10. 13(화) ~ 14(수)	콘래드 서울호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13	10. 15(목)	더팔래스호텔 서울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입법적 과제
14	10. 22(목) ~ 23(금)	서울 플라자호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Climate Change and Effective Actions in Asia-Pacific)
15	11. 4(수)	밀레니엄 힐튼 호텔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발전 전략
16	11. 4(수)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2015년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
17	11. 11(수)	독일 튀빙엔 대학교 법과대학	통일의 법적 문제(Deutsch-koreanisches Symposium: Rechtsfragen der Wiedervereinigung)
18	11. 12(목)	UC 버클리대학 Boalt Hall	한국법의 최신쟁점과 과제 (Current Issues in Korean Law)
19	11. 20(금)	건국대학교 법학관	국가재정법 10년을 회고하며
20	11. 24(화)	밀레니엄 서울 힐튼	북유럽 국가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현황
21	11. 26(목)	코리어나호텔	민관협력에 관한 APG 컨퍼런스
22	12. 3(목)	그랜드 힐튼 서울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과 우리의 과제
23	12. 16(수)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조례입법의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
24	12. 23(수)	밀레니엄 서울 힐튼	한 - 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과제

2. 입법정책포럼

구분	일시 및 장소	발표 주제	발표자
제17회 입법정책포럼	일시 : 10. 8(목) 14:00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법적 과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8회 입법정책포럼	일시 : 12. 21(월) 07:00 장소 : 더팔래스호텔 서울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3. MOU 체결

	협약기관	체결일자
1	국립공주대학교 법학과	2015. 3. 5
2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 5
3	KDI 국제정책대학원	2015. 4. 14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15. 4. 20
5	네덜란드 틸부르그 법학전문대학원	2015. 6. 8
6	중국 사면대학	2015. 6. 23
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5. 7. 23
8	법률신문사	2015. 7. 24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8. 13
10	미국 UC 버클리 한국법센터	2015. 11. 11
11	러시아 법제 및 비교법 연구소	2015. 11. 30

발간간행물

1. 법연

호 수	구 분	제 목	필 자
Vol.46	발행인 칼럼	2015년 봄, 한국법제연구원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이 원
	25주년 기념	한국법제연구원의 질적 도약을 바라며	정공식
	특집이슈 : 경제활성화	스마트공장은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제조업의 창조경제	이규봉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나채준
		정책금융 지원법제 연구	이준호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조용혁
	법제칼럼	行政法の 終末論과 再生論	김남진
	문화와 법	빈센트 반 고흐, 고독한 천재의 최후	박찬운
	연구성과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럽연합)	김정현
		방송통신 콘텐츠 법제연구	최 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홍종현
	연구사업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손희두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김사록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Entertainment산업의 성장과 법 체계적 지원	박민철
		대한민국 게임산업과 정부의 이율배반	이병찬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뉴스	KLRI
2015년 기본연구계획		KLRI	
한국법제연구원 회원서비스 안내		KLRI	
CARTOON 작은선비	깍다거	권혁주	
Vol.47	발행인 칼럼	한국법제연구원 25주년, 초심으로부터의 새로운 시작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축하메세지	한국법제연구원의 설립 25주년을 축하합니다	정종섭 제정부 정호열 이원우
	25주년 기념 특집 칼럼	법제연구원이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전재경

호수	구분	제목	필자
Vol.47	특집이슈 : FTA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의 BIT 모델안 및 기체결 투자협정 연구	이기평
		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지원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이준호
		한국·중국 FTA를 대비한 중국의 위생검역제도와 위생검역관련 통상 분쟁사례 연구	최승환 박언경
	문화와 법	생명의 가치를 그린 예술가들	박찬운
	연구성과	건축법제 선진화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 연구	이세정
		국토공간의 이용현황 조사 및 정보구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현희
		네트워크산업 법제 연구 - 전력 및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	한정미 김윤정
	연구사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 컨퍼런스 개최	류성진
		ALIN 전문가 초청포럼 개최	최지연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이준서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김사록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한국 사회와 법제(法制)에 관한 단상(斷想)	김종철
		핀테크(FINTECH) 산업 규제 패러다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김광준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뉴스	KLRI
		2015년도 일반연구사업 계획	KLRI
		한국법제연구원 회원서비스 안내	KLRI
		대한민국 영문법령정보 공동활용시스템(OPEN API) 이용 안내	KLRI
	CARTOON 작은선비	아름다움이란	권혁주
	Vol.48	발행인 칼럼	창립 25주년, 글로벌 입법환경에 대응하여 법제전략을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짐하며
故 박영도 박사를 추모하며		추모사 : 그의 학문적 열정과 연구원에 대한 애정을 기리며	강현철
		연구성과 : 특별법 입법체계 개선방안	류창호
		수행연구목록	KLRI
특집이슈 : 지방자치		자치기본조례의 현황과 입법체계 개선방안	최환용 정명운
	안전도시 활성화 및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나채준	

호수	구분	제목	필자
Vol.48	특집이슈 :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위한 제언	김명용
		지방자치 20년과 법제방향	최승원
	문화와 법	"박교수, 상폴리옹처럼 해봐"	박찬운
	연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장원규
		한국법제연구원,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김봉수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공효영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해외건설산업 부실의 원인과 한국 법률가들의 대응	김승현
		비공식 행정작용의 활용	김남진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뉴스	KLRI
CARTOON 작은선비	견지망월	권혁주	
Vol.49	발행인 칼럼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마무리하며	이 원
	특집이슈	정부3.0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환용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래영
		미국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	이우영
		정부3.0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현황과 과제	권현영
	문화와 법	독서가 취미라고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어보셨습니까?	박찬운
	연구성과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김정현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 (『여유법(旅游法)』)에 관한 연구	김명아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박훈민
	연구사업	'기후변화와 효과적인 대응방안' 국제컨퍼런스 개최	김은정
		아시아 공공 거버넌스 포럼 개최	김형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입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국제학술회의 개최	송영선
	PUBLICATIONS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윤인숙
최신외국법제정보		장원규	
전문가 칼럼	미국 특허법 개정안	김성훈	
	전문직업인의 "입"	윤남근	

호수	구분	제목	필자
Vol.49	KLRI NEWS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뉴스	KLRI
		제18회 입법정책포럼	KLRI
		2016년도 한국법제연구원 기본연구사업 계획	KLRI
	CARTOON 작은선비	수처작주	권혁주

2. 법제연구

호수	구분	제목	필자
제48호	특집 : 현대 실질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조세법제의 쟁점과 과제	부과제척기간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서보국
		소득세법상 인세(印稅)수입의 소득분류에 관한 소고	오문성
		공동활동단체 구성원간 분담(分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연구	장재형 김병규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재이
		지방세법령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관한 소고	박종수
	연구논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기후변화적응법의 제정	김홍균
		의료손해배상과 집단적 손해부담제도	김기영
		협동조합 기본법과 개별 협동조합법의 병존에 관한 고찰	소재선 이창규
		베트남의 토지법에 대한 소고	조은래
		황금주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성승제
		한일비교연구 : 기업회생법상 부인권	박승두
		"일괄정산네팅(close-out netting)규정의 운용을 위한 UNIDROIT 원칙"을 고려한 입법적 제안	이현묵
	제49호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25주년 특집 :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구현의 입법적 과제	정보공개청구법 "타 법령 지정"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영란법의 체계성에 관한 연구			홍완식
다중이용시설 안전과 입법적 과제			김성배
일반논문		법정모독에 관한 검토 - 그 도입을 위한 제도적 모색을 중심으로 -	최민용
		개인 및 기업의 정보 수집을 위한 산업기술보안법제 정비 방안	김용진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법치현황 및 바람직한 법제에 대한 시사점	안영도

호수	구분	제목	필자
	유고논문	노력의무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박영도
	추모논문	대법원 규칙의 제정 근거와 한계	김해룡

3. 입법평가연구

호수	구분	제목	필자
제9호	연구논문	All on Board? An Assessment of Advances in Dutch Legislative Policy 2010-2015	Koen Van Aeken
		[번역문] 포용적 성장 : 2010 ~ 2015년, 네덜란드 입법정책의 발전에 대한 평가	백옥선
		Legal Definitions and Semantic Interoperability in Electronic Government	Dag Wiese Schartum
		[번역문] 전자정부에서의 법률상 정의와 의미적 상호운용성	성인영
		EU의 입법평가에 관한 DG MARKET 가이드 연구	이헌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김성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	정필운 정원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대한 입법평가 - ITS 지원을 위한 법체계 중심으로 -	변용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시내노선버스의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김정임
		미국의 통근법칙에 관한 입법평가	신동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를 위한 도입법안에 관한 입법평가	이순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최 유

4. 최신외국법제정보

호수	구분	제목	필자
제1호	맞춤형 법제정보	프랑스의 노후설계서비스 관련 법제	양승엽 양리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제도	박수경
	외국법제동향	프랑스의 신소재 식품 등에 대한 부작용 의무보고제도	왕승혜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제정과 주요내용	최종권

호수	구분	제목	필자
제1호	글로벌 현안 분석 / 유럽편 (경제 활성화)	독일의 리츠산업과 법제 현안	박훈민
		이탈리아의 청년고용촉진 관련 법제 현안	신수정
제2호	맞춤형 법제 정보	미국의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관련 법제	임광섭
		독일의 실업급여법제	오상호
		프랑스의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작성 관련 법제	오승규
	외국법제동향	미국의 외국법자문사제도	최경호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제 동향	강영기
	글로벌 현안 분석 / 유럽편 (경제 활성화)	터키의 경쟁법제 현안	문준조
스위스의 간접보유증권법 현안분석		천창민	
제3호	맞춤형 법제정보	미국의 경기부양법 이후 실업보험 변화와 입법 모델	강현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청년 지원제도	양리원
	외국법제동향	유럽연합의 저작권 개정 동향	김창화
		일본의 소송 전 증거조사제도 도입방향	최성호
	글로벌 현안분석	뉴질랜드의 양육비 관련 법제 현안	박복순
		미국의 고령자 복지 법제 및 프로그램	이지연
제4호	맞춤형 법제정보	영국의 차별금지법 개관	심재진
		독일의 의무부담부확약제도	구 슬
	외국법제동향	독일의 비밀출산 법제화 동향	장원규
		미국의 통일 사체제공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이서영
	글로벌 현안분석 : 유럽편(복지)	영국의 육아지원 관련 법제 현황	장혜진
		프랑스의 민간임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법제 검토	문광진
제5호	맞춤형 법제정보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 개관	이승길
		미얀마의 헌법과 대외무역 지원 법제	장준영
	외국법제동향	일본의 농림수산물 지리적 표시 보호법제	정명현
		독일의 최저임금 관련 법제	김원태
	글로벌 현안분석	미국의 프랜차이즈법제 현황과 시사점	문상일

호수	구분	제목	필자
제6호	맞춤형 법제정보	프랑스의 차별금지법 개관	박재현
		일본의 여행정보업 규제	박재훈
	외국법제동향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 개정 동향	이재열
		일본의 난치병환자에 대한 의료법제 동향	소은영
	글로벌 현안분석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지구 중재법 현안	박정현
제7호	맞춤형 법제정보	미국의 유전자치료 규제 관련 법제	박수현
		미국의 자격표준제도 정책	김희정
		일본의 국가자격법제	권경은
	외국법제동향	일본의 독점금지법 개정과 시사점	신영수
	글로벌 현안분석 : 유럽편(방송)	독일의 유해미디어 규제 제도	최종선
독일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규제 현안		김태오	

5.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호수	구분	제목	필자
Vol.5 No.1	Articles	Free Flow of Skilled Labor in ASEAN by 2015: Its Implications on the Rules Regulating	Kanharith Nop
		Towards a Latin Americ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 A Comparative Study	Celia Lerman and Gabriela Ruth Szlak
		Tackling Unfair Practices in Higher Education: Analysis of the Indian Prohibition of Unfair Practices Bill	Raadhika Gupta
Vol.5 No.2	Articles	The EU and Foreign Investment – Exclusive Competence, Shared Responsibility?	Christiane Ahlborn
		Corporate Rescue Procedures in Malaysia	Bidin Aishah
		Law of Medical Negligence in India	Vasudeva Vikrant Narayan

6. 법제이슈브리프

호수	제목	필자
Vol. 01	상가세입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법제이슈	정명운
Vol. 02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법제이슈 개관 및 개선방향 모색	왕승혜
Vol. 03	혐오발언(hate speech)의 정의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이슈	박기령
Vol. 04	지방세외수입금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세외수입법 개정안' 관련 법제이슈	박종준
Vol. 05	아파트 화재시 소방자동차 진입로 및 소방활동공간 확보를 위한 법제이슈	백옥선
Vol. 06	초소형 전기차(Micro-Mobility) 차종분류에 대한 법제 이슈 및 개선방향 모색	천현정
Vol. 07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	김민지
Vol. 08	드론(drone)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권채리
Vol. 09	데이트 폭력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향	장민선



04 2016년도 연구계획

2016년도 사업추진방향

2016년도 사업개요



2016년도 사업추진방향

1. 2016년도 사업목표

국정과제	경영목표	2016년 사업목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받는 연구수행 시스템 운영 국내·외 연구협력 강화 정책연계를 통한 책임입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질서 확립 및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법제연구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2. 연구사업 운영방향

2016년 사업목표	연구사업 운영방향
법질서 확립 및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법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체계확립 법제정비 연구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2016년도 사업개요

1. 기관고유사업

가. 기본연구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p>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II)</p> <p>지난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이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 중이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법적인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상위법령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등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법령 및 헌법합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p>
2	<p>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p> <p>기존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연구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과 함께 법전문가에 대한 정성조사를 실시하여 '2015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일반국민과 법전문가의 법의식 간의 관계를 도출하여, 미래의 입법·법집행·법해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법의식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내지 법치문화의 확립에 기여</p>
3	<p>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p> <p>최근 우리 입법의 경향 중 하나로 각종 산업, 기술, 문화 등을 진흥·조성·육성·촉진·지원하기 위한 각종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형식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진흥법제 유형이 입법체계상 가지는 의미와 성격 및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되는 입법 요소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각종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작업에 유용한 구체적인 법령 입안 모델 및 기준을 설정</p>
4	<p>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p> <p>행정조사 절차와 관련한 기업 등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의 실효성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 및 행정조사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기본법 및 관련 개별 법령의 정비 방안 및 행정조사의 합리적 운용 및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p>
5	<p>수산업 관련 법령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p> <p>현행 「수산업법」은 수산 관련 사업의 대부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다양한 수산업의 현대적인 변화를 담아 낼 수 없고, 농업과 어업 관련 법령의 혼재로 인해 법령체계가 상호 저촉될 수 있으므로, 수산과 어촌을 포괄할 수 있는 입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수산업법의 분법화 방안과 수산업 분야 규제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을 제시</p>

6	<p>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법제 정비 방안 연구</p> <p>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적으로 재난안전에 관한 관련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국민안전의 중요성에 따른 정부의 국민안전 관리정책의 기초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p>
7	<p>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 연구</p> <p>가족기능의 약화 및 해체 등으로 인한 가족내 아동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안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현황을 검토하여 그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관련 법령 제·개정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마련</p>
8	<p>산업 클러스터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p> <p>특정 주요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뒷받침하는 현행 법제가 관련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도출</p>
9	<p>환경규제상의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p> <p>환경규제가 양적으로 강화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현행 법제상 오염이 수반되는 경제활동에 대해 조업정지, 사업장 폐쇄, 부담금 부과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규정되어 있으나, 환경규제의 자발적인 오염행위의 저감을 유도하고 경제활동의 규제부담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전반에 대하여 규제 법제 유형별로 조사 및 분석하고, 규제현실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 강화 및 도입 방안을 제시</p>
10	<p>생체정보의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p> <p>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그 수집, 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법제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법제에서는 규율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전반적인 생체정보의 관리 및 보호의 법제적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체정보 활용기술의 발전과 생체정보 보호 및 관리의 균형점을 제시</p>
11	<p>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법제연구</p> <p>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중 6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첨단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통한 국토관리 선진화 정책을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진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과 그 세부시책을 지속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와 개선방안을 제시</p>
12	<p>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p> <p>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주된 거래방법으로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가 거래현실을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p>
13	<p>행정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제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 <p>행정관청이 수립하는 각종 계획, 특히 개발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들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시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 방안을 제시</p>

14	<p>공동생활주택(Co-housing)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p> <p>정부의 미래형 주거안정화 대책 마련이라는 장기적 주택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관련 법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생활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적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효과적 입법개선안을 제시</p>
15	<p>수시연구사업</p> <p>국정과제와 관련한 현안 법제관련 문제들을 수시 발굴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입법정책 수립에 신속하게 대응</p>

나. 연구관련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p>법령영역사업</p> <p>주요 현행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법령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국격제고, 대외무역과 교류의 촉진, 외국기업과 외국인들의 국내투자 확대에 기여</p>
2	<p>법제정보사업</p> <p>연구원 사업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와 법제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통해 법제정보 이용자 편의성 제고</p>
3	<p>국내외연구공조네트워크 구축</p> <p>법제연구의 국제화·선진화를 도모하고 내적으로는 법제연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법제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상호 물질·인적 교류를 활성화</p>
4	<p>연구기획평가사업</p> <p>연구기획 및 평가를 위한 지원, 기관의 제도개선 및 규정정비를 위한 운영 지원, 효율적인 예산운영 지원, 연구성과 확산 및 대국민서비스기능 강화</p>

다. 연구지원사업

번호	과제명 개 요
1	<p>기관지 발간</p> <p>기관지 「법제연구」 및 소식지 「법연」의 발간을 통하여 국내외 법제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사업의 효율적 지원과 연구성과를 확산</p>
2	<p>법제정보자료 운영·관리사업</p> <p>국가적 입법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연구 및 사업·법제정보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국내외 법제자료를 수집·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연구사업을 지원</p>

2. 일반사업

번호	과제명
	개요
1	지역법제연구사업(X)
	정부의 입법정책수립과 현행 국내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활동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의 법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제적인 이슈의 접점이 되는 분야에 대한 법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효율적 입법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입법평가연구사업(X)
	입법현실에 나타나는 과도한 비효율성과 과잉입법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입법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객관화·과학화를 유도하고, 입법에 필요한 다양한 논의와 이해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규범성의 강화를 통한 입법의 신뢰성 확보를 도모
3	법제교류지원사업(IX)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한국법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의 경제적·민주적 발전은 신흥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법제 분야 발전에 대한 모범적 모델로 인식 되고있는 시점에서, 체제전환국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실질적인 법제협력을 보다 견고히 하고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한국형 입법지원의 기반을 조성
4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VII)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인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국정목표의 실천전략으로 제시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공약의 이행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5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VI)
	우리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전문화·세분화된 입법 요구와 글로벌화에 대응한 다양한 국가현안에 대한 입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법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우리 입법의 대응전략을 모색
6	법제분석지원사업(V)
	국가 차원의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현행 법제분석, 입법안분석 등 여러 유형의 전문적인 법제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여, 국가 주요현안에 대한 법제분석 수요에 부합하는 법제분석 지원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 수립 지원에 기여하고 정책의 선진적 법제화 및 입법의 질 제고에 이바지
7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II)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북한법령 및 연구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DB 구축,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등을 수행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II)
7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정부의 통일법제 준비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분단국 통일과정 및 체제전환국의 법제 연구, 북한법령 및 연구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DB 구축, 북한법제 및 통일대비법제에 관한 연구와 지원 등을 수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8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장애 예방조치에 따른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통한 정보보안 강화
	클라우드 기반의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9	정보보안 강화로 지식자산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정보보안 정책 준수, 지식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자료 공유를 통하여 지식 공유 확산과 부서간 업무 효율성 강화

2015 Annual Report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발 행 일 2016년 2월 1일

발 행 인 이원

발 행 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34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팩스 : 044)868-9913

기획 디자인 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44)867-3538



2015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